지역문화 정책포럼

지역문화분권 시대
기초·광역문화재단의 역할

2019. 6. 27. THU, 13:00 ~ 20:00

인천하버파크호텔 및 인천아트플랫폼

주최·주관 :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목 차

▣ 세부일정 및 내용

▣ 기조발제 ⅱ 박종달(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 문화분권의 시대,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비전과 방향

▣ 제1섹션 ⅱ 모두발제
발표 Ⅰ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비전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발표 Ⅱ 김영현(지역문화진흥원장)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전략 방안」

▣ 제2섹션 ⅱ 분과별 토론
발표 Ⅰ 「'문화비전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1. 허은광(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토론2. 장 걸(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토론3. 나기석(구로문화재단 오류문화센터장)
토론4. 이영준(김해문화재단 문화정책팀장)
토론5. 서우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토론6. 김광훈(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

▣ 제2섹션 ⅱ 분과별 토론
발표 Ⅱ「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전략 방안」
토론1. 정인금(강원문화재단 미래기획팀장)
토론2. 이희진(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토론3. 임학순(카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토론4.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예술부장)
토론5. 강승진(히든어셈블 대표)
토론6. 조정윤(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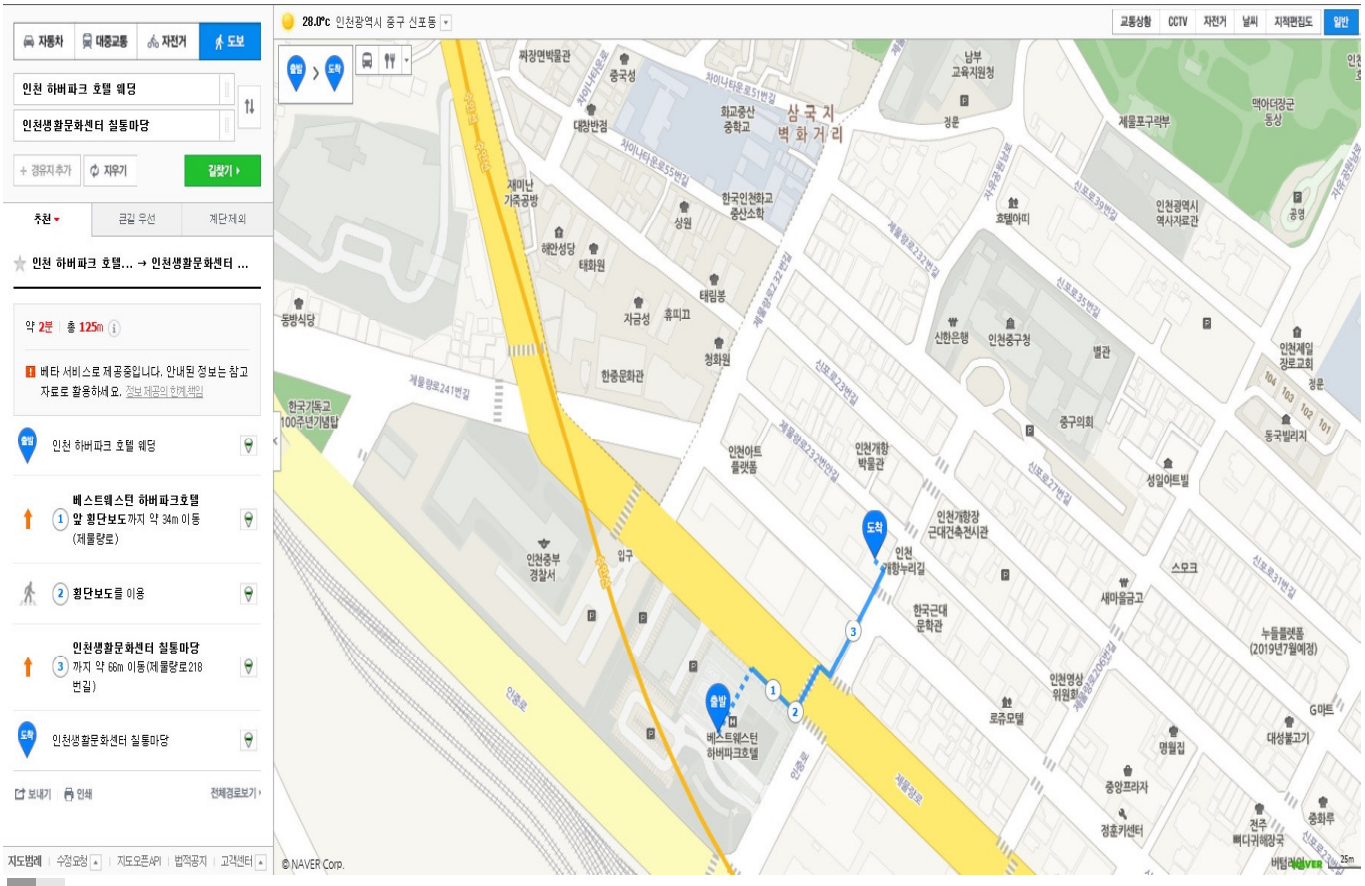
▣ 종합토론

지역문화 정책포럼 일정

구 분	시 간	내 용
등 록	13:00~14:00	- **등록**
인사말	14:00~14:15 (15′)	**사 회 / (배윤수 부천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 인사말 / 김윤기(한광연 회장,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 손경년(전지연 회장,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 - 축 사 / 박종관(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기조발제	14:15~14:45 (30′)	○ 발 제 / 박종달(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문화 분권의 시대,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비전과 방향」
1섹션 모두 발제	15:00~16:00 (60′)	**좌 장 / 이흥재(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 **발 표 Ⅰ /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비전 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 **발 표 Ⅱ / 김영현(지역문화진흥원장)**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전략 방안」
문화정책 간담회	16:10~17:00 (50′)	**사 회 / 이태호(익산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 **발 표 Ⅰ /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토 론 1 / 허은광(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토 론 2 / 장 걸(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토 론 3 / 나기석(구로문화재단 오류문화센터장) 토 론 4 / 이영준(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팀장) 토 론 5 / 서우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토 론 6 / 김광훈(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
2섹션 분과별 토론	16:20~17:40 (80′)	**사 회 / 김지원(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 **발 표 Ⅱ / 김영현(지역문화진흥원장)** 토 론 1 / 정인금(강원문화재단 미래기획팀장) 토 론 2 / 이희진(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토 론 3 / 임학순(카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토 론 4 /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예술부장) 토 론 5 / 강승진(히든어셈블 대표) 토 론 6 / 조정윤(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종합 토론	18:00~19:00 (60′)	**좌 장 / 이흥재(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 종합토론 ○ 문화자치 문화분권 공동선언
만찬	19:00~20:00 (60′)	○ 만찬

주요 행사장 정보

장소명		진행사항	주소	연락처
행사장	인천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	포럼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7	032-770-9700
	인천하버파크호텔 14층 스카이베이	문화정책 간담회	〃	〃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H동 2층 다목적실	분과토론	인천 중구 제물량로 218번길 3	032-760-1032



포럼장소→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 인천문화재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이동하시면 됩니다.

여는 글

축사

박양우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제1차 지역문화 정책포럼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날 지역문화 진흥이 중요한 이슈로 제기된 것은 문화민주주의의 구현 및 문화다양성 보호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여건을 개선해 국민 모두가 일상에서 문화적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의 가장 핵심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작년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선포식'에서 지역분권과 관련하여 기존의 하향식 의사결정방식 대신에 지자체가 수립하는 정책 및 사업기획을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는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을 설정하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지속적으로 추구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체부도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주요과제로 제시하면서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조성,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 및 발전, 지역문화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세부과제로 수립하였습니다.

지역문화분권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는 자율과 협치에 기반을 둔 문화분권의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중앙정부는 지역 문화활동의 동반자로서 지자체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지자체는 계획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사후 관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문체부, 지자체, 광역 및 기초 문화재단 등이 참여하는 권역별 지역문화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해 협치를 실현하고,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균형지수 개발 등 지역문화와 관련된 시의적절한 정보를 생산·제공하여 지역이 스스로 문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동 포럼은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에 의해 공동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서로의 힘을 모았다는 차원에서 뜻이 깊다고 생각합니다. 차기 포럼은 재단 이외에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등 지역 문화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이 참여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포럼을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문화로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많은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포 럼 진 행 순 서

기조발제

박종달(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문화분권의 시대,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비전과 방향"

1섹션 모두발제

좌장 / 이흥재(추계예술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문화예술학과 교수)

발표 Ⅰ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비전 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발표 Ⅱ	김영현(지역문화진흥원장)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전략 방안」

문화정책 간담회

2섹션 분과토론

「인천하버파크호텔 14층 스카이베이」

「인천하버파크호텔 2층 그랜드볼룸」 사회 / 이태호(익산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

발표 Ⅰ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비전 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 1	허은광(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토론 2	장 걸(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토론 3	나기석(구로문화재단 오류문화센터장)
토론 4	이영준(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팀장)
토론 5	서우석(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토론 6	김광훈(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

「인천생활문화센터 칠통마당 H동 다목적실」 사회 / 김지원(광주문화재단 문화사업실장)

발표 Ⅱ	**김영현(지역문화진흥원장)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전략 방안」**
토론 1	정인금(강원문화재단 미래기획팀장)
토론 2	이희진(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토론 3	임학순(카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토론 4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예술부장)
토론 5	강승진(히든어셈블 대표)
토론 6	조정윤(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종합토론

기조발제

문화분권의 시대, 정부의 지역문화정책 비전과 방향

박종달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장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안)

2019. 6. 27.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1

CONTENTS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Ⅰ. 개요
Ⅱ. 계획 내용 및 이행계획
Ⅲ. 계획수립 일정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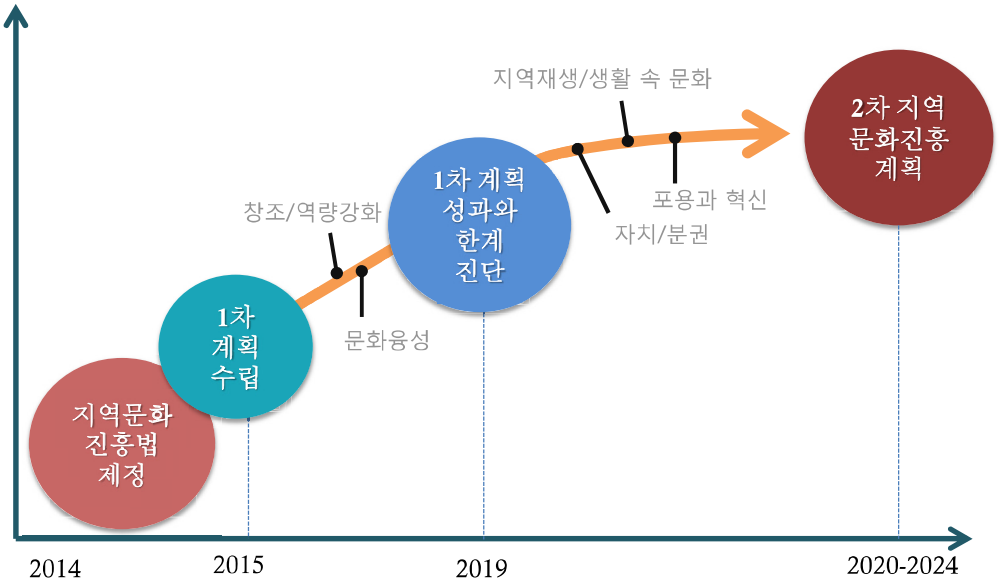
Ⅰ. 개요

3

1차 계획 만료에 따른 2차 계획 수립

1차 계획(2015~2019)의 성과 계승과 한계 극복을 통한 2차 계획 수립

자치와 분권, 포용과 혁신의 지역문화 진흥



4

계획의 법적 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에 관한 사항
3. 생활문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육성에 관한 사항
6.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시행계획 및 그 결과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계획 수립 배경

체계적인 평가와 성찰을 통한 계획

- 1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비전 및 목표의 적합성, 세부 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이행여부에 대한 평가 필요
- 특히 시행계획의 성과를 한계를 수립 주체인 지자체의 참여를 통해 평가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간의 유기적 연계 확보. 중앙과 지역간의 소통**

현실 인식과 미래예측에 기반한 계획

- 인구사회학적 변화, 정치경제적 변화, 국제사회 움직임 등 향후 5년간 전개될 거시환경 변화를 예측하여 계획에 반영
- 국정비전인 「혁신적 포용국가」와 「문화비전 2030」(2018)을 적극 견지하고, 이미 수립되거나 수립될 예정인 문화예술분야 중장기 계획 수용 → **국가정책의 일관성과 통일성 확보**

참여와 소통, 숙의에 기반한 계획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은 지역사회의 여건과 이해관계 반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
- 이에 계획과정과 확정, 시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 지역사회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 소통, 숙의가 전제되어야 함. → **bottom – up 방식의 법정 계획 수립 도입**

Ⅰ. 개요

2. 계획수립의 방향

정책방향 및 지침적 계획

- 1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와 현실여건 진단을 통한 성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계획 수립
- 계획의비전,목표및세부정책과제제시
  법률개정, 재원투입계획,정책지표등계획이행을위한가이드라인제시

소통·협력의 참여형 계획

-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 수립
- 지역문화진흥의비전,목표및세부과제에대한
  공감과합의형성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국가와 지역이 함께 만드는
새로운 지역문화진흥의 비전과 실천

Ⅰ. 연구개요

3. 계획의 범위

공간적 범위

-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228개 기초자치단체·행정시)

시간적 범위

- 계획수립 연도 : 2019년
- 시행연도 : 2020~2024년 (5년간)

내용적 범위

-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평가(성과와 한계)
- 환경 분석(거시환경 분석, 지역문화 여건 분석 등)
- 2차 계획 비전·목표 및 전략과제에 대한 의견조사
- 비전 구성 및 계획목표 설정
- 추진 전략과 세부계획 / 추진체계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1차 계획의 평가와 환류

- 1차 지역문화진흥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평가방식 확정/시행
- 비전, 목표 및 계획의 적절성, 효과성 등을 진단하고 2차 계획에 주는 시사점 도출

1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평가방식

-연구 초기 1차 기본계획에 대한 방법론 확정하고 시행

-관련 분야 전문가, 관계자 및 정책평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합리적 계획평가 방식 논의

1차 지역문화진흥계획의 평가방식 예시

-(대상) 중앙정부의 기본계획만 평가할 것인지, 지자체 시행계획까지 확대 평가할 것인 결정

*(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과 지자체 시행계획 모두를 평가대상으로 하되, 방법은 상이할 수 있음. 지자체의 경우 광역단위를 중심으로 평가 시행

-(평가주체) ① 내부 평가(담당 공무원, 관계자) ② 외부평가 (전문가, 시민 등) ③ 내외부 평가 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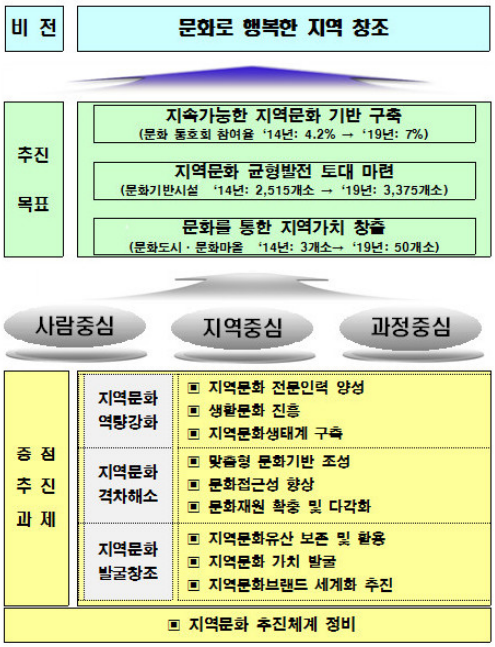
*(안) 중앙정부의 기본계획은 '내외부 평가'를 병행하고, 지자체의 시행계획 평가는 내부 공무원들의 평가(체크리스트 형식)를 우선하되 지역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

-(평가추진과정별 평가) 투입→과정→결과→영향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친 평가를 진행할 것인지, 제시된 목표지표에 따란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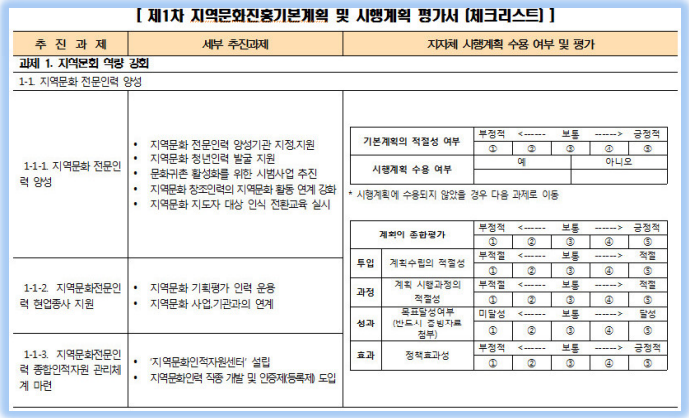
*(안) 사업 자체가 시행되지 않은 것은 결과 평가만 시행.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일부 혹은 전체 완료된 것은 전 과정 평가 시행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1 1차 계획의 평가와 환류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비전/전략/추진과제]



【 제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평가서 (체크리스트) 】

추 진 과 제	세부 추진과제	지자체 시행계획 수용 여부 및 평가
과제 1. 지역문화 역량 강화		
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1-1-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 지역문화 청년인력 발굴 지원 • 문화귀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 • 지역문화 창조인력의 지역문화 활동 연계 강화 • 지역문화 지도자 대상 인식 전환교육 실시	기본계획의 적절성 여부: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시행계획 수용 여부: 예 / 아니오 * 시행계획에 수용되지 않았을 경우 다음 과제로 이동 계획의 종합평가: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투입 – 계획수립의 적절성: 부정적 <------ 보통 ------> 적절 (① ② ③ ④ ⑤) 과정 – 계획 시행과정의 적절성: 부정적 <------ 보통 ------> 적절 (① ② ③ ④ ⑤) 성과 – 목표달성여부 (반드시 증빙자료 첨부): 미달성 <------ 보통 ------> 달성 (① ② ③ ④ ⑤) 효과 – 정책효과성: 부정적 <------ 보통 ------> 긍정적 (① ② ③ ④ ⑤)
1-1-2. 지역문화전문인력 현업종사 지원	• 지역문화 기획평가 인력 운용 • 지역문화 사업기관과의 연계	
1-1-3. 지역문화전문인력 종합인적자원 관리체계 마련	• '지역문화인적자원센터' 설립 • 지역문화인력 작종 개발 및 인증제등록제 도입	

[1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평가 체크리스트(예시)]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2 거시환경분석

- PEST 분석에 의한 거시환경 진단을 통해 2차 계획에 미치는 영향과 주요 쟁점 도출
- 거시환경의 변화예측과 정책 트렌드를 2차 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에 반영

➢ 거시환경 Key Words : 저성장·인구감소·워라벨·시민권(문화권)

-[경제] 잠재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저성장'의 위기가 감지되고, 청년실업률의 증가 등으로 인해 일자리 정책 중요

-[사회] 초저출산 현상의 장기화와 인구감소, 고령인구의 증가, 가구의 감소와 1인 가구의 증가,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 등 급격한 인구사회학적 변화

-[정치] top-down 식 정치·행정체계에서 벗어나 참여와 협치의 중요성 강조(시민권 강화와 참여민주주의 실현)

-[글로벌] UN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을 계기로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발전 시대의 개막

➢ 지역의 도전과 기회

-[지역소멸의 위기] 저출산, 고령화로 대표되는 인구사회적 변화로 인해 도시 및 지역의 쇠퇴, 도시축소(urban shrinkage), 나아가 지역소멸의 위기가 본격적으로 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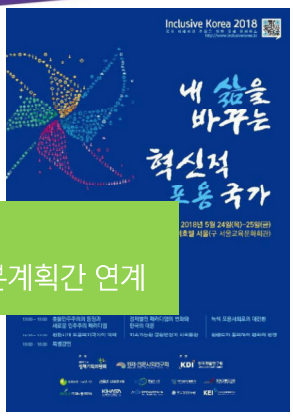
-[지역자치, 분권의 기회] 도시 및 지역의 쇠퇴에 대응한 대안 모색이 국가적 과제가 되고 있으며, 지역의 자치와 분권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

➢ 거시 환경 변화 대응에 있어 문화의 역할

-문화는 포용적이고 통합적인 사회를 촉진하며,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에 기여할 것임. 그리고 문화간 상호 대화를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갈등요인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3. 관련 제도 및 계획 분석



-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연관된 주요 국가 계획 분석
- 문화비전 2030을 비롯한 문화예술분야 중장기계획과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간 연계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 연관된 주요 국가 계획 분석

-[국가미래비전]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주요 의제 분석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균형위)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국가 계획
-[국토발전] 제5차 국토종합계획(수립 중), 지속가능발전계획(환경부 외 관계부처) 등 국토 및 지역계획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 등 문화예술관련 중장기계획 분석

-[문화비전 2030]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와 문화예술인 권리 보장,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등 중장기 문화비전 제시
-[문화예술부문 중장기 계획] 새예술정책 2018-2022,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 2018-2022, 제3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 미술진흥중장기계획 2018-2022, 제1차 문화진흥기본계획 2018-2022 등 '문화예술' 분야 중장기 계획 분석 및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 검토

지자체 문화예술분야 중장기 계획 검토

-지자체 차원에서 수립되었거나 수립 중인 문화예술분야 중장기계획을 검토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4. 문화예술분야 여건 분석

- 문화제도 및 재정, 문화기반, 문화여가 소비 등 제반 문화예술분야 환경 분석
- 지역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여건 분석

문화재정(문화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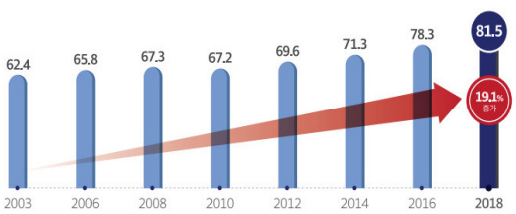
- 중앙정부 문화분야 지출 : 총 지출 대비 1.5%(2018) (* 문화재예산 제외)
- 지자체 문화분야 지출 (문화·예술, 문화재, 체육, 관광 포함) : 총 지출 대비 5.1%

문화기반(문화기반시설)

-2017년 기준 전국 문화기반시설 수 : 2,657개 (2016년 대비 282개 증가)
* (공공도서관) (2014) 865개 → (2017) 1011개 (146개 증가)
* (등록박물관) (2014) 754개 → (2017) 853개 (99개 증가)
*(문화의 집) (2014) 116개 → (2017) 100개 (16개 감소)
-25년 이상 노후 문화기반시설 : 588개 (약 21.5%)

문화여가소비

-문화예술관람률 : (2003) 62.4% → (2018) 81.5%



* 국민의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변화 추이 (자료 :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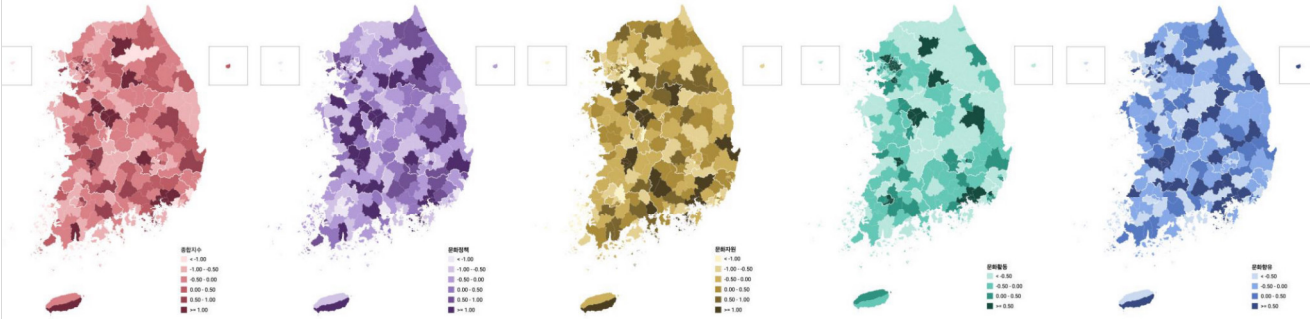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4. 문화예술분야 여건 분석

- 문화제도 및 재정, 문화기반, 문화여가 소비 등 제반 문화예술분야 환경 분석
- 지역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한 지역문화여건 분석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원자료 분석을 통한 지역문화 여건 진단

- 2018년 실시된 '2017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 지역의 문화여건 분석
*(기준년도) 2017년 기준 (2017년 당해 혹은 2017년까지 누적)
*(조사대상) 전국 229개 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2개 행정시, 세종특별자치시)
* 전문가 자문과 문체부 협의를 통해 선정된 4분류 28개의 지역문화지표 자료수집



<종합지수> <정책지수> <자원지수> <활동지수> <향유지수>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5. 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계획 수립 기획단 운영, 지역순회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으로 의견수렴 및 여론환기
- 1차 계획 평가, 2차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사(설문)

'2차 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구성·운영 (6~8월 중)

- (구성) 지역문화 관련 전문가 및 각 기관 추천 인사 중심의 계획 수립 기획단 구성
- (협의내용) 문화정책 일반, 생활문화, 추진체계(인력, 조직), 문화도시 등에 대한 주제토론 및 과제발굴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수립 기획단' 토의 주제 예시 >

분야	협의 내용
문화정책 일반	계획의 비전 및 목표설정, 법·제도 및 재정 관련 정책사업 발굴
생활문화	생활SOC, 생활문화프로그램 전달체계 등 사업 발굴
추진체계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 등 인력양성사업과 일자리 창출 사업 발굴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등 지역문화 전문기관 활성화
문화도시	문화도시, 문화지구 사업 개선,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5. 계획 관련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분과별 연구포럼 운영, 지역순회 토론회/공청회 개최 등으로 의견수렴 및 여론환기
- 1차 계획 평가, 2차 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조사(설문)

➢ '지역순회 토론회 및 공청회' 추진(9~11월 중)

- 지역 현지에서 지역문화정책의 현안과 건의사항을 직접 청취, 협의 및 토론하는 장 마련

* 계획 초안이 도출되는 시점에 전국 단위의 공청회 개최

* 전문가 중심에서 벗어나 광역/기초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의 의견 청취·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

< 지역순회 토론회 계획 (예시) >

구분	주요내용
권역별 순회 토론회	➢ 발표 및 토의 내용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공유 • 지역의 요구와 의견 수렴 • 분과별 분임토의 및 결과 공유
공청회	• 제2차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초안 공유 •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확정

Ⅱ. 계획의 내용 및 이행계획

6. 비전 및 추진계획 도출

- 1차 계획평가, 현황 분석 및 의견수렴을 토대로 2차 계획의 비전, 목표 설정
-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부분별 계획 수립과 목표 지표 설정

➢ 2차 계획의 비전, 목표, 과제 도출

- 현황분석 및 여론 수렴 내용을 토대로 지역문화를 둘러싼 총체적 여건을 진단하고 미래환경을 예측함.
-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을 기본으로 하되 보다 더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문화진흥의 비전 설정, 이의 실현을 위한 세부목표와 과제 도출
- 비전 및 기본목표를 토대로 분야별 세부목표, 정책지표, 전략 및 추진과제 도출

*2차 계획의 비전-목표-전략과제-정책과제-세부과제 등의 체계로 개발

*문화비전 2030의 전략방향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고, 특히 수립시점이 동일한 '제2차 문화진흥기본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함.

➢ 부분별 계획(예시)

- 지역문화정책 환경 개선

* 법제도/재정운용 및 국고보조사업/기반시설 공급 및 운영/그 외 지역문화정책 환경 개선 관련 정책

- 생활문화 진흥

* 생활문화시설(생활SOC) 공급/생활문화 프로그램/생활문화 생태계 구축/그 외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

- 문화도시·문화지구

* 문화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개선 및 안정화/문화지구의 실효성 제고/문화적 도시재생/지역학 육성 및 관련 사업/그 외 정책

- 문화인력 및 기관 육성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지역문화인력 배치 및 관리/지역문화진흥기관의 육성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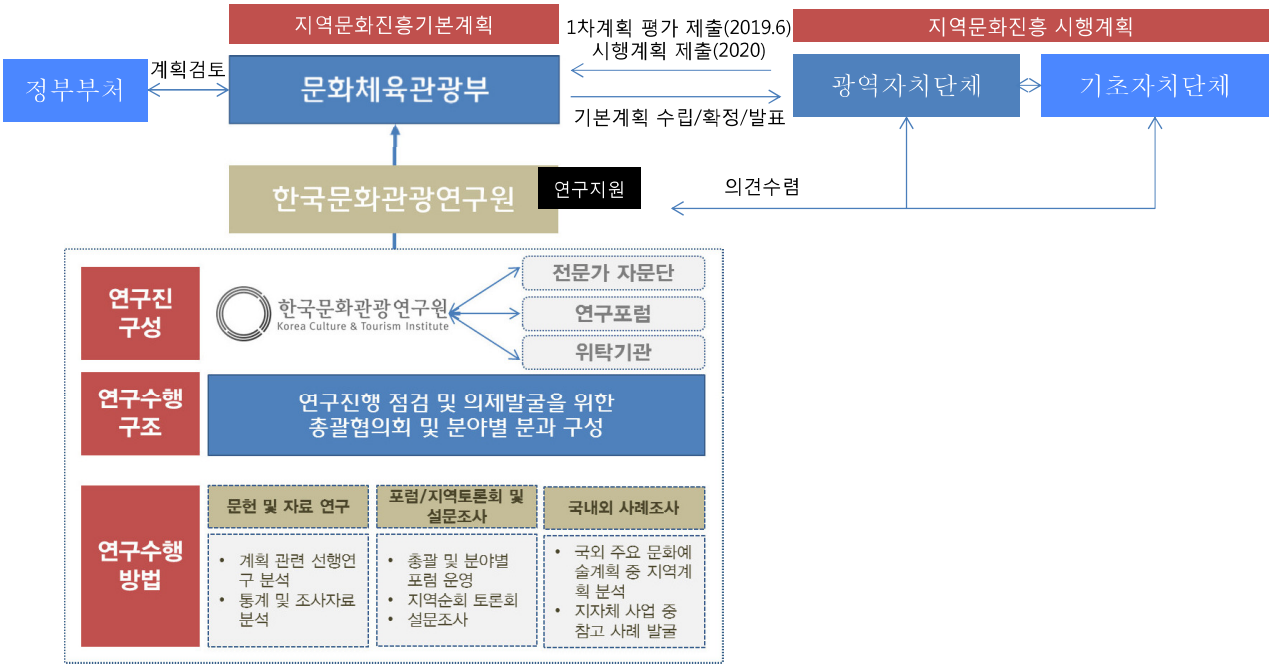
- 지역문화협력 체계 구축

Ⅲ. 계획수립 일정

19

Ⅲ. 계획수립 일정

1 계획수립 체계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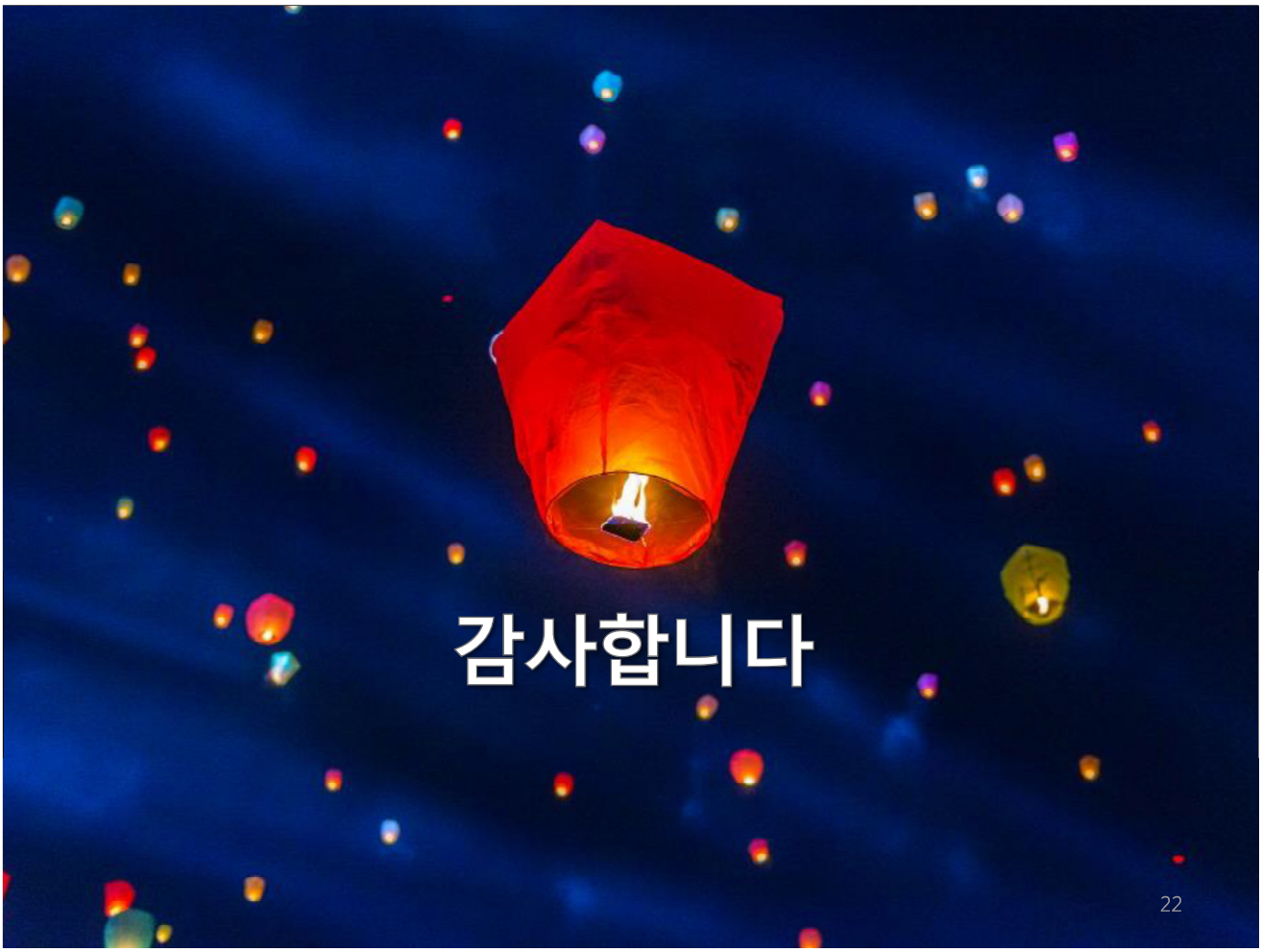
20

Ⅲ. 계획수립 일정

2 추진 일정 (안)

월	1주	2주	3주	4주	5주
19.5월			5.17 지자체 설명회	1차 시행계획 평가(지자체)	
19.6월	1차 시행계획 평가(지자체)			기획단 운영	6.27 지자체 평가서 제출 마감
19.7월	기획단 운영				
19.8월	기획단 운영				
19.9월	지역순회토론회				
19.10월	지역순회토론회				
19.11월	종합토론회 (공청회)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보완		
19.12월	관계기관 의견 조회 및 보완			기본계획 수립	

21



22

모두발제

발표 Ⅰ '문화비전 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윤소영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문화비전 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윤소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Ⅰ.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문화정책에 대한 논의

1. 문화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치열한 경쟁과 사회갈등

○ 재난에 대비하고 안전을 중시하는 사회로의 전환

○ 문화시설보다는 그 시설을 즐기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

○ ’톱-다운’(Top-Down)이 아닌 ’바텀 업’(Bottom-Up) 방식의 문화정책으로

□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의 문화로

○ 블랙리스트도, 화이트리스트도 없는 문화정책으로

○ 검열과 통제의 정책에서 자율과 협치의 정책으로 전환

○ 과거 청산에만 머무르지 말고 미래 비전을 구상하는 문화정책

○ 냉전의 한반도에서 평화의 한반도로 가는 이행기, 문화정책의 변화가 시급

□ 젠더불평등에서 젠더평등의 문화로

○ 젠더불평등에 대항하는 미투 운동

○ 문화예술계의 미투 운동이 의미하는 것

○ 미투 운동 이후 문화예술계의 지각변동

○ 젠더평등으로 가는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의 전환

□ 불공정과 독과점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로

○ 불공정으로 기울어진 문화현장을 바로잡는 문화정책

○ 창작, 유통, 향유의 관계와 분배의 과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 위계와 관행으로부터 문화예술계 현장 인력들을 보호

○ 모두가 다양하게 문화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의 문화로

○ 분권 형 개헌의 시작, 자치분권의 시대로

문화 분권의 실현에서 지역문화 정책은 핵심적인 사안으로서 장기적으로 문화정책에서 자치 분권의 시대를 열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

지역문화의 분권은 장기적으로 문화정책, 행정, 계획 등에 있어 각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을 살릴 수 있는 문화자치로 이행해야 함

○ 문화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한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방향 제시

지역문화진흥법의 개정, 지역 문화분권을 위한 실질적인 실행조직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에 대한 방향이 제시되어야 함

지역문화의 분권을 구체적이고 장기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그에 따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함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에서 만든 문화분권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이 되어 만드는 자발적이고

고유한 문화분권 정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 문화 인프라의 분권에서 문화 자치와 고유성을 만드는 정책으로

문재인 정부의 문화분권 정책은 문화인프라의 지방이전의 단계에서 공공문화 기반시설이 실제로 지역의 분권을 위해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문화분권 정책이 실질적인 문화자치로 가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 단계에서 지역의 고유한 문화정체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실질적인 문화 분권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

실질적인 문화분권의 실현을 위해 문화행정의 혁신과 전달체계의 방식에 있어 중앙-지역이라는 위계질서의 낡은 관행들이 개선되어야 함

문화 재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재원의 규모와 재원의 배분, 활용방식에 관해서 실질적 문화분권의 수준에 맞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주요한 지역문화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광역 및 기초지자체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 중심에서 쉼이 있는 문화로

○ 일중심의 사회, 과도한 노동시간

○ 노동생산성을 위한 여가 시간의 필요성

○ 자유시간을 문화시간으로

□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간소외가 아닌 인간감성의 문화로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인간소외에 대한 공포

○ 기술과 경제 중심에서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을 중시하는 문화

○ 인공지능의 시대, 예술 상상력의 중요성

○ 인간 고유의 창조적 역량을 높이는 계기로 전환

2.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1)]

01.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 조성

1-1. 지역문화진흥 재원의 지속적 확충

1-2. 포괄적 보조사업 확대

1-3. 지역 주민 참여문화예산제도 지원

1-4. 지역문화 정책기반으로서 문화정책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1-5.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새로운 지표 개발

1-6. 생활문화를 일상생활 속에 누리는 여가가 있는 삶의 방향 정립・지원 다각화

1-7. 누구나, 어디서나 문화적 삶이 가능한 지역 만들기

1-8.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과 활동 지원

1-9. 읍면동 청년 중심의 ‘문화일꾼’ 배치 추진

1-10. 지역문화기관/기구, 시설/공간, 문화현장의 네트워크 구축

1-11. 지역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1) ‘문화비전 2030’의 의제 6에서 제시된 ‘05.지속가능한 지역관광 생태계 구축’, ‘06.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마련’ 과제는 제외함

02. 지역 문화의 고유성 유지 발전
2-1.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지원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조성사업 본격 추진
2-2.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을 활용한 재생사업 확산
2-3.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역특화 코텐츠 육성
2-4. 콘텐츠산업에서 협치에 필요한 중앙과 지역, 지역간, 지역내 협력체계 구축
2-5. 지역축제 지원체계 개선
2-6. 지역 전통문화 연구와 활용 활성화
2-7. 역사문화자원을 발굴하기 위한 지역학 육성
2-8. 책으로 소통하는 생활(마을)공동체 구현

03. 지역문화 거점기관 운영 혁신과 지원체계 마련
3-1. 생활권에 기반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대
3-2. 문화기반시설 운영 혁신
3-3.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자율성 강화
3-4.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지원 제도화 추진
3-5.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

04. 문화 협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4-1.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4-2.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Ⅱ. 지역 현장의 이슈[2)]

1. 문화자치를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

□ 지금은 문화자치를 위해 문화적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점임
○ 문화자치 이전에 지금은 정책의 결실보다 문화자치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위한 문화적 환경 조성이 우선되어야 하는 시점임
○ 기본적인 문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결과를 양산하도록 장려하는 정책 지원 사업이 필요
□ 지역의 정책과 사업추진 이전에 2~5년의 긴 호흡으로 진행되는 지역의 문화예술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지역에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현시점에서 선행 작업으로서 지역 스스로 지역의 역량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하고 충분한 데이터와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제대로 된 정책과 사업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 5년까지 문화예술분야 지역연구가 필요
□ 지역에서 지역의 문화에 대한 아카이브 구축작업과 이를 담는 공간 조성이 필요
○ 지역에서 문화로 축적된 지식의 창고를 구성하고 지역의 문화기록과 역사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아카이브 구성이 필요하며 이를 담든 아카이브 공간 조성이 필요
○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문화예술이 지역사회 및 경제와 유기적 결합을 도모할 수 있는 교점을

2) '문화청책(聽策)포럼'(2017~2018)에서 제기된 의제를 정리함

만들어야 함

□ 정책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는 작은 단위로서 동네포럼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정책의견을 수렴하는 포럼이 시, 군 등의 거대한 행정단위가 아니라 마을, 커뮤니티 등의 보다 작은 단위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

2. 지역주민의 참여

□ 지역의 문화자치를 위한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자 공론의 장을 만드는 장치로서 문화정책 실명제가 검토되어야 함

○ 지역에서 지역 스스로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이에 대한 책임감을 갖기 위한 정식 구조로서 문화정책 실명제가 검토되어야 함

○ 근본적으로 정책수립이나, 정책형성에 대한 지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큰 상태로,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공개적인 공유장, 공론화가 필요

○ 투명한 공시제도, 공론의 장을 통하여 현장 활동가도 이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원 사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소통의 장, 공론의 장이 필요

○ 그 정책이 누구에 의해 발의되고 추진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새로운 정책 제안 및 기존 정책과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투명하게 공론화하여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함

○ 이를 통해 정책집행과정 등에서 잘못된 것과 아닌 것을 평가하고 보완하여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문화정책의 진행상황과 결과를 환류 하는 시스템을 공공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구축해야 함

□ 지역주민이 지역문화 정책과 행정의 중심이 되어야 함

○ 지역문화 정책과 행정의 중심은 지역 주민이 되어야 하며, 문화를 통해 함께 살아갈만한,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함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 구축 / 새로운 역할관계

□ 서로에 대한 신뢰를 쌓아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이 문화분권의 시작점이 되어야 함

○ 지금 문화 분야에서 정책적 신뢰도는 너무나도 낮은 상태로 신뢰관계회복이 필요

○ 중앙정부 - 광역 - 기초 사이에 신뢰할 수 있는 행정구조가 성립되어야 하며 이와 동시에 민-관 협력을 위한 신뢰가 성립되어야 함

○ 신뢰적 관계 형성이 문화분권의 시작점이 될 것

□ 공공은 문화자치 및 분권에 맞게 각자의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고 상호 조율해야 함

○ 중앙과 광역, 광역과 기초, 그리고 관련기관 등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을 재정립하고 조율해야 함

○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사업 안에서 수평적인 협업구조를 고민해야 함

○ 지방정부는 국가재정을 대신하여 사용함에 대한 정당성을 위해 지방정부가 얼마나 효과적, 효율적으로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는지를 중앙에 그리고 지역의 민간에 공개하고 증명하는 소통구조를 마련해야 함

□ 지역 문화예술관련 부서의 전담체계 개선이 필요함

○ 하나의 사업을 다수 관리처가 담당하는 등 전담체계가 확립되지 않아 불필요한 업무 증가하고, 책임소재가 불명확한 문제들이 발생

□ 정부차원에서 문화자치와 분권을 위한 장기적이며 단계적인 추진 로드맵이 구성되어야 함

○ 문화분권 및 자치로 가는 과정에서 지금 각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특성을 반영하고 다양한 격차나, 다양성 문제 해소 등이 필요

○ 장기적인 계획 하에 단계적으로 지역으로 이양하고 조정하는 방법론이 정책로드맵으로 구성되어야 함

4.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 지역에서 문화자치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해야함

○ 지방분권과 자치가 논의되고 있음에도 아직도 지역에서는 탑다운 방식의 정책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음. 중앙정부는 제대로 된 문화자치를 지원하는 역할로서 각 지역에서 효율적, 합리적으로 문화정책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지역의 문화자치를 간섭하지 않는 차원에서 점검해야 함

○ 지역은 지역 스스로 현미경같이 지역을 바라보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문화정책 추진을 위하여 세밀하게 접근해야 함

○ 또한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문화지원정책의 우선순위 조정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 4-5년의 긴 과정과 호흡으로 지역을 통합 구성하는 정책 및 사업이 중요한 시점임

○ 지금 지역문화 현장에서는 성과중심적 사업보다는 4-5년 이상의 긴 과정과 호흡을 가지고 지역을 통합하고 지역을 자치에 맞게 재구성하는 정책 및 사업이 중요한 시점임

○ 문화자치를 위한 기반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과와 이력이 아닌 과정과 피드백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과 사업체계가 필요

□ 지역 문화자치 추구 시 지자체장의 영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는 제도 필요함

○ 지역문화자치와 분권이 올바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 등의 영향을 받지 않게 독립성을 보호하는 제도를 국가 정책적으로 마련해야 함

5. 지역문화진흥법 개정

□ 지역문화진흥법의 올바른 작동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함

○ 지역문화진흥법을 문화자치 및 분권에 맞게 지역을 중심으로 독자적인 계획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그리고 중앙정부인 문체부의 의도가 적절히 반영되고 평가, 환류될 수 있는 틀로 재구성하여 개정해야 함

○ 더불어 법안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서는 지방재정법이나 국토계획 및 이용법, 지원 특별법 등 관련법에 필요한 조치가 필요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게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한다”의 규정이 추가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문화진흥 계획을 수립할 때,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도 추가되어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나 동일한 문화자원을 공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할 때 이의 수립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해야 한다”의 규정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함

6.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

□ 지역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제도적으로 정립되어야 함

○ 문화재단이 행정부서로부터 정책결정의 독립성을 가져야 하며 재정적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 구성이 필요

○ 지역문화재단 인력 상당수가 비정규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며 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 및 해결방안을 제공해야 함

□ 지역문화재단 운영에 대한 재원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함

○ 지역문화재단들은 사업, 프로그램, 교육 등 자체적인 업무를 수행 중이며 기획, 운영하는 인력 및 역량은 전문성을 가짐

○ 그러나 재단 운영에 대한 재원이 부족하며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예산, 정책,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받음

○ 재단 운영을 위한 충분한 예산지원이 필요

□ 지역문화재단은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단 스스로의 발전이 있어야 함

○ 지역문화재단 업무의 전문성, 투명성, 독립성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지자체 행정 공무원보다 전문성을 갖춘 지역문화재단들이 여러 정책과 사업 및 행정지원을 리드하면서 수행해야 함

□ 문화예술분야 행정가 전문교육과 소양교육이 필요

○ 문화예술 관련 행정기관은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차별성을 가진 행정 구조를 마련해야 함

○ 이를 위해 특히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가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교육과 소양교육, 현장의 의견을 듣는 과정이 정기적으로 마련되어야 함

○ 지역에서부터 행정직들에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시간 및 비용 등)을 제공하고, 나아가 기업으로 확대시켜 문화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저변확대 필요

Ⅲ. 문화생태계 변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 전략

1.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도입

□ 2020년 3.5조원 규모 지방이양 시작, 지역문화사업의 대규모 지방이양 예정

○ 2018년 10월 30일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확정·발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균특 포괄보조사업을 중심으로 ’20년에 3.5조원 내외 규모의 중앙정부 기능을 지방정부로 이양 계획

○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의 일괄개정을 통한 권한이양이 추진되고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사업, 관광개발사업 등 지역밀착형 문화사업이 대규모 지방사무로 이양될 예정

▸ 재정분권 추진방안 기본원칙
① (지방의 자율성·책임성 제고) 중앙의 기능 ·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22년까지 7:3으로 개선
② (균형발전 촉진과 재정격차 완화) 지역간 세원 불균형에 대한 보정장치를 마련하여 어느 지역도 현재보다 불리해지지 않도록 설계
③ (단계적 추진) 재정분권 성과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19년부터 시행하는 1단계 추진방안과 근본적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2단계 추진방안으로 구분
▸ 1단계 재정분권 추진('19~'20년)
– (지방세 확충) 지방소비세 도입('10년) 이후 최대폭(10%p)으로 지방세 확충
– (기능이양) 기능이양('20년 3.5조원 내외)으로 지방의 자율성·책임성과 권한 확대
– (소방직 국가직화 지원) 소방안전교부세율 인상으로 안정적 재원 확보
– (재정격차 완화) 재원을 전국에 고르게 배분, 상생과 통합의 지방자치 구현
▸ 2단계 재정분권 추진('21~'22년)
–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지방세 확충방안, 추가적 기능이양 방안 등을 포함해 지방재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편
▸ 기대효과
– ① 국세:지방세 비율 7:3 달성 ② 지방의 권한·기능·재원 대폭 강화
→ 강력한 재정분권을 통한 균형발전 지원

□ 지방재정 부담이 심화되는 가운데, 지역간 문화재정 격차 심화 가능성

○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2019년 75%:25%, 2020년 74%:26%로 지방세 비중이 커지지만, 여전히 지출(총재정사용액 2017년 예산기준 중앙:지방=40%:60%)과의 불일치,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부족 예상

○ 한편 지자체 문화재정 비중은(총지출대비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 최소 0.57%부터 최대 13.28%까지 지자체간 문화재정격차가 상당한 실정

○ 구조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세입보다 세출이 항상 많고 많은 부분을 중앙정부로부터 의존하도록 되어있어, 지방분권 시 사무이양과 재정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으면 실제 사업이 유지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지방분권 시 재정적 대책이 필요함

□ 포괄적 보조사업에서 문화사업의 예산계획 방안 필요

○ 지방분권이 확대되면 지역 간 경제적 격차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별 재정격차도 커질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 우선순위가 낮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에서 예산 규모가 축소되거나 폐지될 수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제약으로 인해서 사업의 중요성과 시급성 측면에서 사회복지에 비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문화분야 재정 사업의 예산 규모가 크게 축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문화 분야는 사회복지, 농어촌 등 타 분야에 비해 국비보다 지방비 부담이 이미 많아 자주재원 증가가 지자체 문화예산의 증가로 이어질지 불확실

문체부 국고보조율은 타 부처에 비해 이미 낮은 수준으로, 하향조정 시 사업 위축 우려

○ 지방재정이 열악한 실정에서 사회복지 등 의무지출에 대한 부담을 고려하면, 문화사업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높으므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역간 문화격차 보존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문화 사업을 위한 별도의 예산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와 평가환류 시스템 vs. 재정의 자율성 확대와 책임성 강화의 이슈

□ 재정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필요

○ 지자체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와 이에 따른 책임성 강화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기획 보조사업 방식은 축소하고, 중앙정부가 재정배분을 관리하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재원배분 시스템 구축 필요

○ 지방분권과 맞물려 문화적으로 고립되는 분권화의 위험을 방지하고 문화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기 위해 계약(협약)으로 중앙과 지역의 관계를 형성하는 제도 검토 필요

□ 지자체 문화예산의 효과적인 편성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문화 분야 운영모델 제시 필요

○ 지자체 문화예산의 효과적인 편성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과 주민 등이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을 요청할 수 있는 지역 주민 참여문화예산제도 운영 방안 도입과 구체적인 전략 필요

○ 참여형 지역문화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문화분야 '주민참여예산제 조례' 마련도 필요

2. 지역문화정책의 추진체계 확립과 자생력 확보 전략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관리체계 구축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며, 자치법령(조례 등)을 통해 지역문화 사업을 총괄하고, 이러한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의 책무를 가짐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설정

지역문화의 균형발전 및 특성화 계획 수립

지역학 연구 지원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문화도시 및 문화지구 지원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운영 활성화

지역문화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 확보

○ 지역문화재단(또는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은 위와같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되고 운영됨

□ 지자체 단위의 지역문화 협력기구

○ 현행법상 문체부 장관 소속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이외에, 지자체 단위로 지역문화협력기구 설치 필요

○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나 문화예술인의 협력을 통해 지역문화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지역의 문화기관 및 단체 간 협력, 정책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협력기구 설치 필요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인력 양성과 배치의 기반 구축

○ 지역을 기반으로 한 문화 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문화시설에 배치하여 지역문화의 자생력을 확보하며 지역의 청년 문화인력 부족현상도 해결하는 방안 필요

○ 현재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에 대한 사업단위 형태를 지속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만들기

○ 문화예술분야의 경우 직능 수준이 타 분야 대비 높아 '경력을 갖춘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은 것에 비하여, 분야 내 인력들의 경력을 지속적인 관리·지원할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하는 방안 마련도 필요

○ 지역에 배치된 문화전문인력의 교육과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3. **지역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실현 : 지역의 문화안전망 구축**

□ 생활문화를 통한 사회의 문화적 가치 확산

○ 지역 내 생활문화 실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인식과 경험이 확대되어야 함

○ 사회안전망의 기본이 문화의 일상적 삶을 통해 구현되어야 한다는 새로운 삶의 혁신 모델 제안
예) OECD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Better Policies for Better Lives)'을 나타내는 Better Life Index(BLI)에서 소득이나 안전, 교육, 환경 이외에도 '일-생활 균형'을 통한 생활문화의 정착을 포함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사회혁신과 행복한 사회 구현을 위해 문화안전망을 지역단위로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을 개발하고 지역민들의 문화권을 보장하는 것이 지역문화정책의 구체적인 지향점임

□ 지역의 문화안전망 구축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 마련이 절실함

○ 문화정책과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문화예술가-기업-공공기관-학계-주민들이 교류하고 관계망을 형성하여, 문화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확산

모두발제

발표 Ⅱ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전략 방안

김영현 | 지역문화진흥원장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전략방안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

문화 행정 거버넌스

기초 광역, 중앙의 거버넌스라는 주제를 받았을 때 , 발제 의뢰의 목적을 생각해 보니 지역이라는 기본 개념을 다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읽혔다. 기초 단위로부터 출발하는 광역과 중앙의 협력체계를 지역이란 개념을 전제로 이야기 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또한 문화 행정을 다루고자 하는 것은 예산과 전달체계에 대한 구조화를 이야기 하려는 의도로도 읽힌다. 전달체계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이다. 예산만 놓고 이야기 하는 구조가 아니라 정책과 역할에 대한 구조로 바라보면 어떤 조직과 인력들이 자기 역할과 임무에 대해 정의하고 그를 인정 하고 실천 할 것인가의 문제로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지역과 전달체계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통합적 구조에서 접근해야 한다.

통합적 구조에 대한추진체계는 이미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2020에서 밝힌 바 있다. 이제는 중장기 계획 5년차가 마무리 되고 2020년부터 새로 시작 되는 중장기 계획을 만들고 있는 단계이다. 2019년을 마감 하면서 2014년에 만든 2020 계획의 시행과 평가를 명확히 해야 하나 정치적 상황과 많은 변수들로 인해 제대로 시행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명확한 계획과 실행 , 평가가 전재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이 수립 되어 올해에는 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나 이제야 2030에 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현시점에서는 전달체계 이전에 정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재정분권과 사업들의 지역이양을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시점이다. 많은 지역이양사업들을 두고 우려와 기대가 교차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우려 속에 지역 균형 발전이란 전제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 하고 있다. 정책에 대한 현장 대응력과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혜안과 실천들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정부정책과 궤를 같이 하고 당면현실에 대한 대응력을 기르는 것이 중요한 현실임을 감안 해 보면 이 시간에 다뤄야 할 명제는 명확해 진다. 해서 논의와 협의의 과정에 대한 지역문화진흥 차원의 질문과 생각들을 공유 하는 수준에서 글을 이어 가고자 한다.

※다음은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2020에서 다루고 있는 추진체계에 대한 계획안이다.

지역문화 진흥 기본계획 2020의 추진체계

□ 지역문화관련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지역문화 부처협의체 구성**(문체부, 행자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연계, 지역문화 행정분과위원회 구성(시행령 제 22조 제8항)

○ **지역문화사업 범부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행정정보 및 지역 상호 간 정보 공유와 공동협력 추진

○ **문화행정 기능 강화 및 연계 협력**

- 지역문화와 복지, 환경, 교육, 지역, 예술 영역의 지역 네트워크 협력
- 지역 내 지역문화기관 상호 간 연계·협력시스템 구축

<사회공헌 5대 영역 지역문화네트워크 정책>

사회공헌 5대 영역	지역문화네트워크 정책
복지	장애인.어린이.노인.여성.다문화 '문화복지 지역네트워크 사업'
환경	지구환경, 지역환경 살리기 '문화생태 지역네트워크 사업'
교육	소외계층.문화취약계층 '문화교육 지역네트워크사업'
지역	소외지역.문화취약지역 재생 '문화공동체 지역네트워크 사업'
예술	예술인복지, 지역예술보존 '문화예술 지역네트워크 사업'

□ **효율적 지역문화정책 수립·집행체계**

○ **지역문화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체계적 평가**

- 지역중심 정책 및 사업평가 체계 도입과 환류체계 구성
  · 양적 지표를 질적 지표로, 결과 중심에서 과정 중심으로 평가
- 지역문화사업의 이력관리제 실시, 고유의 평가체계 개발, 중장기 사업계획과 이행실적 관리

○ **상향식 전달체계(기초→광역→중앙) 구축**

- 지역의 행정·문화기관·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성

○ **지역문화의 정책주체 간 역할 분담 및 협력 강화**

- **(중앙부처)**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을 통한 정책비전 수립, 정책추진의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 제시
- **(지자체)**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하는 시행계획을 통해 지역문화정책 및 사업 추진
- **(지원기관 및 단체)** 문화행정주체(정부 및 지자체)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구축, 자문 및 지원

□ **지역문화진흥원 설립·운영**

○ **지역주민의 문화향유와 문화복지 서비스 총괄 지원**

* 현재 지역문화관련사업이 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예술교육진흥원, 공예디자인진흥원 등 분산 추진 중

○ **지역문화정책 추진 지원 및 평가·분석 기능**

- 정보 수집·분석과 자료 제공, 컨설팅 서비스 제공
- 지역문화 관련 DB 및 네트워크 구축·운영
- 지역 문화 정책 및 사업에 대한 평가와 환류

○ **'국가문화인적자원센터' 기능 수행**

- 지역문화인력 인증 및 등록제도 등 관리체계 구축 운영
- 지역문화인력 양성사업 총괄 및 문화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 **지역문화협력위원회의 구성·운영**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수립 지원**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등 주요계획 및 정책의 수립 자문
- 지역문화정책관련 중요 사안의 조정과 심의

○ **지역문화 정책 수립 및 추진 네트워크 역할**

- 지역의 문화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공유 및 협의 창구 역할
- 부처 간 협력 등 지역문화 정책네트워크 구성·운영

지역문화 정책은 공급자 중심의 정책적 지향을 보인다. 물론 정부기관과 행정기관들이 공급자 중심의 정책지향을 만드는 것을 충분히 인정 할 수 있다.하지만 관련기관들이 협력구조를 만드는 과정에서 기초로부터 출발하는 상향식 구조에 대한 전제를 하듯이 기초로부터 출발하는 정책 단계를 다시 밟을 필요가 있다.

계획에서는 기초 단위에서도 라운드 테이블의 필요성을 강조 하고 있다. 민. 관의 거버넌스의 축에는 문화예술영역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역의 이해 관계자와 관심자들. 그리고 타 부처의 관련단위들까지 참여하는 광범위한 협력테이블이 필요하다. 이 단위에서의 논의를 거쳐 지역 현안의 문화적 해결과 문화예술영역의 가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전략도 함께 수립 될 가능성을 보여준다.(사회공헌 5대 영역 - 이 영역은 범위와 대상을 보편적 단위로 확장해야 한다) 이런 과정을 밟을 때 진전한 상향식 구조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문화도시지정과 관련해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된 10개의 도시들 중 형식적 협의체를 만들어 계획을 낸 도시가 있었다. 이 지자체에 대한 요구는 기존의 협의체를 해체하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 할 것을 전재로 한 경우처럼.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협의체 구성은 향후 정책의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에서 기대 할 수 있는 효과들은 매우 많을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6월 20일 발표 되었다. 새로운 평가시스템이 적용된 평가에서 문화예술영역은 그리 높지 않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1983년 경영평가 제도가 도입 된지 30여년 만에 사회적 가치,

공공성 중심으로 경영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한 첫 적용 사례이다.

2018년 처음 발표 된 경영평가 제도 개선안이 반영 된 첫 번째 경영평가에서는 안전, 윤리경영, 일자리, 상생협력등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이 50%이상 대폭 확대 된 지표가 반영 되었다.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사회적 가치 항목은 향후 문화예술계에 주요한 이슈로 등장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에 대한 지역사회의 동의와 공감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광범위한 논의 테이블을 구성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전략이 될 것이다. 그동안 문화예술영역이 아무리 문화적 가치에 대해 주장해도 소비적 관점, 욕구나 향유에 맞춘 잉여가치로 해석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넘어서기 힘들었다. 이런 분위기는 문화비젼 2030에서도 여전히 보인다. 문화적 욕구에 기반을 둔 정책들이 반영되고 또 한축에서는 예술진흥정책들이 등장한다. 여전히 이런 두 기조의 정책들은 삶의 현장에서 다분히 공급자 중심. 그리고 문화계급에 대한 그림들로 존재한다.

문화부의 정책 사업을 통한 예술진흥정책의 다양한 포진은 환영 할만하다.(물론 더 정교하고 전략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과 공평하고 보편적 지원구조에 대한 논의도 중요한 시점으로 본다) 하지만 향유를 전재로 한 욕구기반 정책들은 삶의 현장에서 파급력과 효능감이 매우 떨어 질 수밖에 없다 . 지역에서 문화적 욕구를 증대 하겠다는 정책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했을 때 분명한 한계점들을 갖고 있다. 문화향유 실태조사를 보더라도 지난 통계에서 보면 채 10%를 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90%가 넘는 국민들은 사업의 영역에서 여전히 제외 된 상태라는 것이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문화정책들의 사회적 가치나 공공성으로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일은 소원 한 일일 뿐이다.

이제는 문화기본법에서 이야기 하는 문화의 개념을 다시 소환해야 한다. 문화를 예술로 등치시키는 현재적 정책 지향을 삶의 총체적 양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문화의 개념으로 다시 재고 해 보아야 한다. 그럴 때 일상이 예술이 되고 마을이 무대가 되고 일상과 관계된 모든 관계망들이 문화가 될 수 있다.그런 관점으로 문화를 해석하고 접근 한다면 지역사회의 모든 일상적 행위들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와 가치들이 문화영역에서 가치와 의미로 등장하면서 사회적 응원과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지역문화를 중심에 두고 거버넌스. 그리고 지역이양사업과 재정분권 등을 놓고 통합적 접근을 해보면 문화예술에 대한 그 동안 사회적 인식이나 정치와 정책에서 인식하는 수준을 통해 왜 이런 현실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도 그런 인식이 존재하는 이유를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예술중심 관점에서의 행정

문화예술을 진정으로 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존중하며 역할과 임무가 주어지고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과 지원이 있었는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 창작자들에 대한응원과 지지를 지원사업을 통해서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사업들은 과연 충분한 것이었을까? 만약 충분하지 않았다면 그 요인은 무엇이었을까 찬찬히 되짚어 봐야 한다. 창작자들의 범위와 영역은 또 어느 선까지인가? 무엇을 지원하고 그들의 성장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예술가들에 대한 복지적 차원의 접근들은 과연 사회적 정당성을 얻기 위한 합의나 동의과정은 충분 했었는가? 이런 방식의 지원은 과

연 예술가들에게 충분히 호응을 얻고 있는가? 예술가들은 현재의 지원구조에 대한 감사가 있는가? 혹은 여전히 불만이 있는가? 불만이 있다면 어떤 요소들이고 그 불만은 정당한가? 예술가들의 지위와 권리를 어떻게 행정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떤 지원수단이 필요한가?

이런 많은 질문들 속에서 행정이전에 사회가 국민들이 지역민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응원과 지지를 보낼 수 있는가가 어쩌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그들의 판단과 인정을 전제로 하지 않고 권력화 된 예술계의 요구에 반응하는 정책들이 만들어 진 것은 아닌가? 그런 수위까지의 고민들이 모두 논의 되어야 한다.

정부의 정책지향은 선거과정에서 정리 되고 그 내용이 정권의 지향으로 나타난다.
정치가 정책이 되는 과정이다. 행정은 그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나 국민적 공감대의 시간을 거치지 않은 정책들은 늘 행정과 현장의 부딪침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많은 기초 현장에서 위에 언급한 언로를 만들어 낸다면, 그리고 그들의 현장성이 반영된 정책들이라면 어떤 정치적 개입이나 권력구조가 개입 한다 해도 흔들림이 없을 것이다. 또한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그동안의 아픔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정권이 바뀔 대마다 누군가에게는 늘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 불편한 기준과 원칙, 그리고 새로운 권력 집단의 등장이 아닌 국민적 공감대를 전재로 한 기준과 원칙이 적용되고 정상적인 통로를 통해 적정한 인재들이 등장하는 사회가 작동 될 것이다.

어찌 보면 정책과 행정은 별개로 볼 수도 있다. 정책은 지향이고 그 지향을 원칙과 기준을 갖고 실현 하는 것이 행정 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을 기준과 원칙 안에 담아 구현 하는 역할은 행정의 몫이기도 하다. 그 과정에 수많은 정치적 고려와 안배라는 명목으로 정책은 기형적 형태를 띠게 되는 수많은 경험을 우리는 축적 하고 있다. 그런 정치적 고려는 정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의 변화를 통해서 가능 할 것이란 기대를 갖고 다양한 사회적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적 지향도 지역분권과 재정이양을 통해서 나타 날 수 있는 우려와 현실에 대한 논의들이 활발해 지고 있다. 하지만 재정의 지방 이전이 우리 문화계에는 희망이기도 하고 절망 일 수도 있다. 재정의 활용권한이 지역으로 이전 되었을 때 지방정부의 의지에 따라 예산편성이 필요 순위에 따라 정해지게 되면 문화예술영역은 우선순위에서 한참 더 밀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깊다.

그런 과정 안에서 지역균형 발전 차원의 지향과 현실 속에서 문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해 지는 순간이다. 문화행정을 통해서 정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과 이에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과 민간 파트너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문화적 가치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을 넘어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재로의 인식과 공감이 필요해 지는 시점이다.

문화개념에서의 행정 - 정책이 만들어 지는 과정과 통로의 변화

▶ 정책이 만들어 지는 지역사회 담론장의 상시적 운영과 통로 개설.
▶ 관심과 욕구가 있는 이해 관계자들을 넘어 지역사회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론장 필요.
▶ 민간 문화플랫폼과 새로운 공공 플랫폼. 행정 협의체등 공론장의 다각화
▶ 일상의 문화가 지역 가치가 되는 과정에 대한 적극성.

일상에 예술이 결합 되지 않아도 문화로 읽히는 삶의 현장들이 등장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의, 식, 주, 일과 놀이 등 다양한 일상에 품격을 더하는 과정이 문화가 되는 개념이 등장하고 이를 문화 행

정이 자기영역으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똑같은 김치 담그기를 가르치는 이주여성들에게 농림부는 기술교육이라 한다. 그런데 문화기관에서 하면 문화 프로그램이라 한다. 일상이 문화가 된다는 자기 논리를 지향해야 한다.

지역의 문화정체성은 경제적 활동이나 생산품에 의해서 규정 되는 과거의 경험이 이제는 문화정체성으로 인식 되지 않는 시대라고 경계 짓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 봐야 할 시점이다. 문화의 경계를 짓는 많은 상황들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광고가 나오기 시작 했다.

이천의 특산품이 쌀과 도자기로 규정 된지는 그리 오래 된 시간이 아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과 이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이천의 특산품과 도시 브랜드를 쌀과 도자기로 이야기 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는 아빠가 다니는 회사에서 생산 되는 반도체가 지역 특산품이라고 우긴다. 현재를 살고 있는 아이의 눈에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이 중요한 시점이고 오늘의 현상이 문화 일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가 우리지역 특산품이라고 우기고 그것을 인정받게 하기 위한 노력을 아빠와 함께 한다. 그 과정을 통해서 지역민들이 반도체가 지역 특산품이 맞는다는 동의를 하게 된다. 선생님도 시험문제의 답안이 틀렸다고 했던 시험지에 다시 동그라미를 치는 과정은 우리에게 시사 해 주는 점이 아주 많을 것이다.
고정된 시선으로 문화를 해석하거나 바라보던 우리에게 던지는 이야기는 새로운 변화에 대응하는 문화전략들이 필요함을 다시금 일깨우게 한다.

어느 순간 예술이 일상으로부터 분리되고 특별한 위치를 갖게 되는 예술자본의 구조 속에서 일상이 다시 문화가 될 수 있다는 확장 된 해석을 해볼 용기를 주는 사건이다. 또한 그런 주장과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새로운 통로가 만들어 지고 누구나 등장 할 수 있는 열린 구조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광역단위의 행정 -광역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 지고 있는 시점이다.

기초단위의 문화재단들이 만들어 지고는 있지만 작은 시, 군 단위까지 문화재단들이 모두 만들어지는 데는 많은 한계와 어려움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작은 지역 도시들은 통합 중간지원조직들을 만들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다. 각 부처마다 다양한 지원사업을 하는데 그때마다 중간지원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 그래서 찾는 대안들이 통합중간지원조직이다. 인력과 예산의 부족과 더불어 지역정치의 한계는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 장애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위기이기도 하지만 기회이기도 하다.
정부 정책 중에서 대부분의 사업은 공간과 장소에 기반을 둔 사업들이 많다. 또한 사회복지 영역과 평생 학습개념의 활동들은 특정 대상이나 필요에 의해서 운영 되는 사례 중심이기도 하다. 하지만 문화영역이 예술중심 정책으로만 일관 하지 않고 광범위한 일상의 문화와 지역 사회의 가치재로 등장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다.또한 문화에 대한 역할 중심의 제안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지역사회의 호응은 달라 질 수 있다고 본다.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30에서도 언급하지만 문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던 것을 기억 한다면 이제 문화를 통한 지역사회의 이슈와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는 접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할 때이다. 사회적 문화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는 일들이 이제는 문화영역의 당연한 역할로 인식 되어 지는 순간들이 오면 문화의 위상과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의 가치재로 존중 되고 그 안에서 사람들의 삶이 달라 질 수 잇을 것이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런 수순을 통해서 문화영역의 활동 범위와 역할이 확장 되고 그런 과정이 새로운 문화적 일자리와 충분한 예산과 조직적 틀을 만들어 가는 경로가 될 것이다.

늘 기재부와의 힘겨루기에서 문화영역이 소외 되거나 배제 되는 이유를 우리는 분명하게 인지해야 할 것이다, 문화가 왜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야 하고 이를 넘어 서야 한다. 사회적 가치재로 문화 안전망의 시스템과 영역을 만들어 그 안의 활동들을 프로그램과 콘텐츠로 만들고 그 안 의 관계망이 문화가 된다는 등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그래야 기초 재단들이나 지역의 중간 지원조직들이 새로운 문화적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 구성 될 수 있다. 기초문화재단들은 현재의 사업들만도 매우 많은 편이다. 하지만 이제 역할과 임무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앞에 언급 한 일들은 기초 단위에서 운영해야 하는 영역으로 본다. 이럴 때 광역 재단들은 본조직의 변화와 확장성을 가져가고 기초 단위의 변화를 돕고 협력하는 다양한 역할들을 자임 하고 나서야 한다.

문화안전망-욕구기반의 문화정책에서 역할과 권리기반의 문화정책으로

문화예술영역이 갖고 있는 문화적 가치를 넘어 사회적 가치를 획득하는 과정 설계가 중요해 진다. 앞에서 이야기 했지만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에는 이미 문화영역에 대한 사회적 역할 론을 명시 해 놓은바 있다.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역할이 있을 것이란 목표들이 있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무수한 비전들이 쏟아져 나와도 결국은 문화를 통한 삶의 질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이는 향유를 기본으로 하는 욕구기반 정책들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텍스트의 변조는 있지만 정책적 지향과 변화가 크게 읽히지는 않는다. 이제는 욕구기반의 정책을 넘어 역할과 권리기반으로 넘어가야 한다.

< 삶의 질 측정지표 사례 (자료: 통계청) >

삶의 질 측정 분야	삶의 질 측정 내용
소득·소비	소득, 소비생활, 소득분배를 중심으로 경제자원에 대한 통제력
건강	건강행태, 건강상태, 의료서비스의 질
노동	고용환경과 근무환경 중심
교육	교육기회의 충족도, 교육자원, 교육효과로 구분
주거·교통	주택수급, 주거환경과 질, 교통의 질
안전	범죄와 사고, 화재 및 안전을 위한 인프라
가족	가족형성, 가족형태, 아동양육 및 가족관계
환경	환경오염도와 환경투자 중심
사회통합	사회적 포용과 사회자본
문화·여가	문화여가 자원(시간 및 비용), 기반시설 및 문화여가 활동

통계청의 삶의 질 측정 지표에서 나누는 분야는 이제 문화예술분야가 모두 참여하고 개입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아야 한다. 이미 현장에서는 이 모든 분야에 참여하거나 주도하고 있는 사례들이 등장 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을 미담이나 문화예술 영역의 가치로만 보관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재로 인식하고 인정하게 만드는 공감의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런 목표를 가질 때 문화안전망이란 개념이 사회적 공감대로 확산 되고 역할이 인정 될 때 위상과 보상이 같이 만들어 질 것이다.

거버넌스는 신뢰와 상호작용을 통해서 진화 한다.

거버넌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대로 작동 된다. 문화행정은 역할과 임무에 대해 정확한 기준과 원칙을 토대로 유연한 현장 대응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과 행정은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일련의 경험은 현장과 전문가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던 아픔을 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점점 경직 되어 져 가는 행정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현장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런 과정은 발전이란 지향과는 거리가 멀어 지는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발전을 넘어 “혁신”을 이야기 하는 정치 사회적 분위기에서 자칫 복지부동이란 단어가 행정을 규정짓는 단어로 정착 될지도 모르겠다는 불안감들이 현장의 우려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존의 행정은 자기검열에 익숙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정부는 관행적 행정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관행보다는 변화가 지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문화예술진흥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관행을 바꾸려는 시도를 할 때 신뢰는 쌓일 것이다. 그런 과정에 다양한 주체들이 등장하여 자유롭게 논의에 참여 하고 논의의 과정을 통해서 진화 한다면 그것이 상호작용을 통한 진화 방법일 것이다. 이는 곧 잠자고 있던 무수한 암묵지들을 공유지로 만들고 그 공유지가 지역의 문화가 되고, 과정이 문화가 되는 길일 것이다.

지역 발전 정책 및 계획과 연계 하는 지역문화진흥

지역발전 정책은 균형발전을 전제로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 고도화 되고 있는 경제구조는 지역이란 개념을 어떤 의미로 해석 하고 있는지 해석하고 그에 대응해야 한다. 도시 집중화와 글로벌 시대가 만들어 내는 인구 변천사를 보면 이제 인구소멸지역에 대한 논의는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산업화 시대 이전에는 지역의 경제 정체성이 지역 정체성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현대 사회는 경제적 구조를 지역 정체성으로 연계 짓는 것에 대한 인식은 야박하다.

도시나 지역 브랜드를 만들어 내기 위한 정책 사업이나 축제 등은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지역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문화관광영역은 그런 측면에서 정책영역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추세이다. 또한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변화과정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 등을 통해서 많은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지만 마지막 귀결은 문화도시로 정리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정체성을 만들어 내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문화도시를 선택하는 지자체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는 통합적 접근과 도시민들의 역할과 관계망이 현재적 삶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일 것이다. 문화도시의 기본적 프로세스는 오랜 협력과 거버넌스를 전제로 했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앞에 언급한 모든 과정이 문화도시로 가는 길목의 일과 역할들일 것이다. 문화도시가 모든 것

을 해결 해 줄 것은 아니지만 문화예술 영역에서 자기 위상과 역할을 높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지역발전이란 대 전제하에서 이뤄지는 일이고 해석 가능한 일이어야 한다.

지역 현실을 반영 해 보면 경제력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지 못한 지역은 등장의 계기나 욕구조차 만들어 내가 힘든 상황일지도 모른다. 이를 위해서는 균형적 발전의 목표를 세울 필요가 절실하다. 재정분권을 앞에 두고 하는 온갖 걱정은 균형발전이란 틀에서 고민하고 해결 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었던 잘하는 곳에 지원하는 방식에서 균형적 발전이란 측면에서 필요성이 더 대두되는 곳에 지원하는 방식으로의 전환도 필요해 보인다.

논란의 여지는 충분하지만 잘해야 한다는 단기성 성과와 목표가 아니라 과정에 필요한 교육이나 컨설팅등 다양한 지원프로세스를 가동하여 균형적 성장의 방식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인구 소멸이나 사라져 가는 역사를 바라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모든 삶의 현장에 문화가 녹아 나기를 기대한다. 그랬을 때 지속성과 다양성 등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한 문화 원형들이 그 빛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맥은 한국 사회의 안녕과 정체성에도 지속적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안에 행정의 역할이 충분해 지기를 더불어 고대 한다.

문화의 사회적 역할로부터 출발해 확장 된 협력의 단위와 영역을 넘나드는 문화행정 거버넌스에 대한 제안이 정책과 행정과 현장의 장에서 더 많은 현자들의 논의와 비판의 재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분과별 토론

발표 Ⅰ '문화비전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토론 1

허은광 |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토론 2

장 걸 | 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토론 3

나기석 | 구로문화재단 오류문화센터장

토론 4

이영준 | 김해문화재단 문화예술팀장

토론 5

서우석 |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

토론 6

김광훈 |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

지역문화재단 version 2.0을 기대하며

허은광 (인천문화재단 기획경영본부장)

문화자치와 문화분권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운 '문화비전 2030'은 문화재단의 새로운 역할을 요구한다. 문체부가 펴낸 <2018 전국 문화기반 시설 총람>에 따르면 현재 광역문화재단에 근무하는 인력이 1,364명,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에는 3,973명의 인력이 활동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전국의 거의 모든 광역도시에 문화재단이 설립되었으며, 기초문화재단의 등장 또한 가속화되고 있다. 지역마다 부침이 없지 않았으나, 문화재단이 지역 문화진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과거의 비전이 이제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현재까지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은 지역의 필요에 따른 응대였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 행정체계 중심의 문화예술지원 사업을 문화재단으로 이관하여 공공예산 지원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한다거나, 공무원 직영 또는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문화시설을 문화재단에 편재하여 시민 문화서비스를 높이는 등 지역의 문화적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문화재단 설립의 최우선 목적이었다. 그동안 전국의 광역과 기초문화재단은 이러한 초기 설립 필요성에 충실히 응전하며 조직의 틀을 확장해 왔다. 지역문화재단 version 1.0의 주요한 역할이 지역의 지체된 문화적 현안에 대한 해결에 있었다면, 그러한 원천문제가 해소된 후에는 새로운 문화재단의 역할, 소위 지역문화재단 version 2.0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문화비전 2030'은 지역문화재단 version 2.0을 요청한다. 현재까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설계한 사업과 예산을 '전문성'을 명분으로 집행했던 실행 기관의 역할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지역분권의 관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입안하는 정책과 사업의 중심이 시민에게 있다는 전제하에, 그들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논의를 끌어내는 역할을 문화재단에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화비전 2030'의 의제 6-지역문화분권 실현 항목만 일별하더라도 지역문화재단에 기대하는 새로운 역할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역문화 정책기반으로서 문화정책 전담기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 활성화, 지역문화기관/기구, 시설/공간, 문화현장의 네트워크 구축, 지역문화정보 플랫폼 구축, 생활권에 기반한 커뮤니티형 문화공간 확대, 지역문화재단 운영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자율성 강화, 지역문화재단 총액예산 지원 제도화 추진, 문화기관의 특성을 인정하는 출자・출연기관 운영 개선, 중앙-광역-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 지역문화-예술분야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의제는 제안 당시부터 지역문화재단의 역할을 직・간접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하기에 지역문화재단과 관계한 정책들의 올곧은 실현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위상이 제도적으로 재정비될 필요가 있다.

설립 이후 10년 차를 넘어선 지역문화재단이 제법 많아지고 있다. 그동안 여러 문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문화시설을 운영하면서 문화재단의 기능과 역할이 확장되는 경향이 대세였다. 그와 동시에 지

역문화재단마다 조직 내부의 문제나 지역 문화 현장과의 관계에서 다양한 부침을 겪어왔다. 일부의 문제는 재단경영의 시행착오에서 비롯된 성장통으로 볼 수 있으나, 다수의 문제는 제도적 결함에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제도의 관점에서 크게 두 가지 지점을 토론해 보자.

먼저 지역문화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다. 민법에 기초한 재단법인은 적립기금이 존재의 기반이다. 그러나 기초문화재단은 물론이거니와 광역문화재단 대부분도 약속된 적립기금을 확충하지 못한 상황이다. 인천문화재단의 사례를 보자면, 2004년 설립 당시에 2010년까지 1,000억원을 적립하겠다는 계획을 조례에 명시하였으나, 2019년 현재 조성된 기금은 약 550억원에 머무르고 있다. 조례 개정을 통해 2020년까지로 적립 기간을 순연했으나, 그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적립기금 확충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유일한 대안은 아닐 것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고민과 대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다는 현실에 있다.

다음으로 지역문화재단이 비정규직 인력을 양산해온 문제와 관련해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보조사업과 위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임시적 고용형태로 인력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빈번해지고 있다. 기간이 한정된 사업, 인건비를 보조사업에 의존하는 사업, 문화시설의 한시적 위탁운영 등 전문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한편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정책을 내세우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정책의 실천이 제도적으로 막혀있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인천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소개하고자 한다.

인천문화재단의 정례포럼인 목요토론회에서 경기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시설 운영 현황과 문제를 일별해볼 기회가 있었다. 인천문화재단이 운영 중인 문화시설 대부분은 인천시로부터 위탁받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문화시설의 운영성과를 평가하여 2~3년 단위로 위탁기간을 연장해왔다. 그러나 최근 인천시 산하 문화시설의 운영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 문화시설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동요하고 있다. 반면에 경기문화재단은 대부제도라는 행정적 근거에 따라 10여년 이상 문화시설의 운영권을 보장받고 있으며, 그러한 결과 직원의 고용 안정성 확보 문제보다는 전문성 높은 직원을 어떻게 선발할지가 현안이라는 발표를 접했다. 이러한 사례를 볼 때, 지역문화재단의 특성을 인정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의 개발과 도입이 이미 실천되고 있다 할 수 있다. 지역문화재단이 처한 환경과 조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기초로 함께 고민한다면 ‘문화비전 2030’이 주문하는 문화재단 version2.0의 실현을 조금은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문화비전 2030’, 지역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장걸(전주문화재단 사무국장)

문화분권·자치에 대한 발제자님의 깊은 고민과 관련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제안 등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어쩌면 발제문 속의 과제들이 해결된다면 문화분권·자치뿐만 아니라 지역자치·분권도 이뤄낼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또 한 편으로는 그 많은 것들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발제자님은 본문 중에서 **‘각각의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중앙에서 만든 문화분권 계획이 아니라 스스로 중심이 되어 만드는 자발적이고 고유한 문화분권 정책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 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국책연구원, 광역지자체연구원 등으로 정책연구의 역량이 집중되어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연구원의 설립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분권과 자치의 핵심은 재원과 역량에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문화자치를 위한 지표’가 시급히 개발되어 각 지자체의 역량을 점검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먼저 시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과 권리는 이양되는데 그것을 받을 역량이 없다면 지역 간 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양과 역량강화의 정책이 동시에 병행된다면 일부지만 부정적 결과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협치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을 위해 **‘중앙, 광역, 기초 지역문화협력위원회 설치’**가 필요함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족한 탓인지 일부는 협업, 협력 등을 협치로 오인하는 경향이 있는듯합니다. 결정된 것을 함께하는 협업·협력과의 다름을 인지해야합니다. 협치는 참여자들 간 합의된 결정권의 행사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사업, 그리고 예산을 결정하는 데는 높은 수준의 전문성과 많은 정보를 검토할 수 있는 과정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많은 협치기구들이 있지만 절차를 지키는 수준을 넘지 못하는 이유는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있다면 풀뿌리 문화분권과 자치도 있을 것입니다. 발제자님이 문화분권 실현을 위해 제안하신 **‘지역 주민 참여문화예산제도’**가 주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나 각종 경제지표 등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듯이 시민들은 팍팍한 삶으로 적극적인 참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문화의집·생활문화센터 등과 협력하여 참여제도를 만들고 시범운영을 통해서 확대해 나가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문화를 고민하고 동네가 그것을 통해 공동체적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기회와 경험을 주는 것입니다. 발제문에 있는 ‘동네포럼’이 좋은 예입니다.

행정자치가 아닌 문화자치는 문화적 유·무형자원을 포함하고 있을 것입니다. 무형자원 중에는 인적자원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하는 차원의 자치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정책과 사업의 기초가 되는 인적자원은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전국의 대학에서 문화예술관련 학과들이 폐지되거나 통합되고 있습니다. 과격한 표현을 빌리자면 거의 붕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취업의

문을 열기가 힘들어서이기도 하겠지만 대학의 평가기준에 취업률이 매우 중요한 지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한 학과에 대한 별도의 평가기준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병행해 관련 일자리의 공급도 필요합니다. 서울·경기권에 집중되어 있는 국·공립문화예술기관 및 공간(시설)의 지역 이전과 분원의 설치 등을 구체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입니다. 지역에 머물며 고민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들이 반복되어 역량을 확보하는 선순환의 과정이 담보되어야합니다.

지역문화재단은 타 출연기관-기술원, 콘텐츠진흥원, 복지재단 등-과 달리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역할도 지자체별로 혼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관광, 문화시설 운영 등에 대한 요구에 바람 잘 날이 드물지요. 관광과 시설의 기초가 문화예술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의 많은 관광지와 문화공간에 채워진 각종 콘텐츠들이 그 지역 내에서 만들어진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역문화재단은 해당 지역의 문화예술생태계를 건강하게 하는 것과 동시에 시민의 삶을 문화적으로 풍부하게 하는 정책과 사업의 전문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문화재단의 운영 및 설립 시에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필수 설치부서와 사업을 규정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달리 설정할 수 있는 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문예진흥기금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다가 광역과 나눠 운영하는 형태로 변해왔습니다. 또한 개별적으로 기초지자체에서도 이를 설정하여 운영하는 곳도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광역지자체 내 배분은 자원과 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으로 대부분 흘러가고 있으며 기반이 취약한 지역은 소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1/N 형태로 나눌 수는 없지만 인구수, 도시규모,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해당 기금을 분배하여 기초지자체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다면 기초지자체에서도 제도를 정비하여 기금을 설치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만합니다.

발제문 중에는 **‘문화안전망’**이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틀어서 **‘문화행복망’**이라고 하면 어떨지요? 억지스럽지만 복지는 ‘안전망’, 문화는 ‘행복망’이 되길 희망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발제자님의 깊은 고민에 경의를 표하며 그 고민을 해결하는데 미력하지만 저도 힘을 덧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와 현실사이의 비판과 개선에서 보여야할 자주적 태도

나기석(구로문화재단 오류문화센터팀장)

○ ‘문화’, ‘분권’, ‘자치’, ‘지역’ 등 표현이 갖는 개념과 의미 정리 필요
[문화체육관광부] 어떻게 읽히고 해석되는가?
문화=체육=관광 등치관계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문화와 예술은 고의적인 샴쌍둥이 정책이라는 생각이다.

○ 발제문 전체에 걸쳐 현안을 진단하는 내용들이 많다. 예술분야에 국한 한다면 쉽겠지만 ‘문화’를 이야기 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예를 들어 2016년 기사에는 ‘아디다스’가 중국공장을 접고 다시 독일로 들어간다. 중요한 것은 그 큰 공장의 직원이 16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머진 로봇(자동화시스템)이..

○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구로구 ‘문화체육과’는 ‘문화관광과’로 과명을 교체한다. 이유는 관광산업 육성과 관련한 중앙정부 정책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단번에 문화 환경이 변하는 것이다.(구로는 현재 외국인 관광객 투숙이 엄청나게 늘었다.)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2025년 세계박람회 등을 통해 관광객 4천만시대를 준비하는 인프라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고 실질적으로 경기회복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2032년 서울·평양 올림픽 공동개최를 서울시도 준비한다. 우리의 문화정책은 무엇을 고민해야 하는가?
발제문 중 ‘평화의 한반도로 가는 이행기, 문화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라고 진단하고 있다.
‘가는’은 제삼자거나 관망인데 정책이 주도적이거나 입장이 자주적일 수 없다. ‘가야하는’이라는 입장이 명확해야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까?

○ [재정분권 추진방안]이 확정 발표되고 2020년 3.5조원 규모의 지방이양이 화두 인 것 으로 보인다.
더불어 사무(행정)이양까지 기초, 광역, 중앙이 이와 관련하여 훨씬 많은 논의가 있어야하겠지만, 톱-다운과 바텀-업을 이분법적으로만 볼 문제는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싶다.
예를 들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국토보유세’ 논의는 [재정분권 추진방안]보다 강력하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논의선상에 있는 ‘지역상품권’으로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0.57%~13.28%의 지자체 지방재정 격차 문제의 실질적인 개선 영역에서 논의될 수 있는 사안이다. 답이 정해진 것처럼 연구하기 전에 더 많은 현장에서 여러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야 하는데 주제가 너무 어렵다.

○ 2018년 서울시에서는 4년에 걸친 [2030 서울생활권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낸다. 구로구의 예만 들어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꽤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했다. 소위 ‘문화’라고 정의 내릴만한 영역들이어서 참고해야할 정보들이 많다. 그러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진행된 것으로 조사과정에서 ‘구로문

화재단’ 이 도움을 준 일이 없다. 아니 전문가 또는 자문단으로도 참여하지 못했다. 그런데 계획서에는 문화, 예술, 여가, 생활 등의 단어를 쓰고 있다. 제시된 계획과정을 보면 나름 구체적이기에 더 자괴감이 든다.

문화비전 2030은 선언적이거나 거룩하다. 실제적인 지역의 문화생태계를 자주적 입장에서 준비하고자 한다면 ‘실사구시’ 하지 않는 문화담론이 이해도 하기 전에 소위 지역이라는 곳에 닿아 있다. 개념을 정의하기도 바쁘다. (글로벌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문화다양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지역문화, 생활문화, 문화생태계문화민주주의, 자치분권, 문화분권, 문화자치,,)

○ ‘옥천신문’ 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지역신문이다. 2019년 5월 현재 옥천군민은 51,330명이다.

‘옥천신문’ 은 무엇을 기사라고 생각하는지, 이것을 우리는 어떤 문화적 현상이라고 논의하는지? [스틱]이라는 책에는 “구독률112퍼센트인 신문이 있을까” 라는 소제목으로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있는 ‘던’ 이라는 인구 약 14,000명가량의 조그만 지역 신문 <데일리 레코드>를 소개하는 장이 있다.

‘예술은 가장 좋은 치유의 도구’ 라며 열심이다 못해 하도 새벽에 들어와 남편에게 2AM이라는 별명을 얻은 시인이며 지역활동가인 ‘조하연’ 을 누가 알아봐야하고 도와야 하는가의 문제가 ‘사람이 있는 문화’ 를 표방한 문화비전 2030을 중심으로 지역이 무엇인가 준비해야 하는 좌표가 되지 않을까?

○ 아침11시, 오류문화센터는 실험 중

[수요 음악방], [콘서트, 아침 11시] 평일과 주말할 것 없이 지역에서 아침 11시는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오류동역이라는 전철역을 끼고 있고 ‘전국 최초’ 라는 타이틀을 거머쥔 ‘행복주택’ 이 붙어 있으며 갑을로 나뉜 선거구역 중에 ‘갑’ 쪽에 구로구 인구 반인 약 20만 명에게 처음 생긴 공공문화시설이고 극장인 곳에서 시간, 공간, 생활 동선 등을 고민하여 내 놓은 문화 사업이다. 예술 장르와 출연진을 먼저 고민한 것이 아니다. 미약한 실험이며 유의미한 표본을 도출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다.

예술회관을 넘어 문화재단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의 문제가 단번에 정의되지 않으리라 본다. 주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이야기할지 막막하여 원고 중에서 토론 주제를 세부적으로 잡지 않았다. 2018년 한국광역재단연합회가 거의 동일한 주제와 제목으로 포럼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 더불어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지역을 순회하며 많은 토론회를 가진 것으로도 알고 있다.

윤소영 연구위원의 발제문 마지막 부분의 ‘지역의 문화안전망 구축’ 이라는 단어가 이채롭다. 이 하나만의 주제로도 많은 이야기가 될 듯하다. 토론자 분들과 주제를 나눠서 토론을 할 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당면하여 서울지역의 구단위 재단이 함께 논 할 수 있는 주제인지 나는 어렵다.

“사람”과 “지역”이 공존하는 문화정책을 위하여

이영준(김해문화재단 문화정책 팀장)

윤소영 연구위원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이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람이 먼저인 문화로, 위기와 청산에서 비전과 미래로, 젠더 평등, 공정과 상생, 그리고 무엇보다 중앙집권에서 자치 분권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 문화비전 2030에서 담고 있는 핵심가치는 “사람”이 있는 문화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련한 새 예술정책(2018-2022)에서는 아쉽게도 지역분권과 지역문화 예술진흥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부족해 보입니다. 예술인 인권, 지원체계의 독립성과 자율성, 예술 가치 중심의 지원, 예술인 복지, 예술참여환경 조성, 소수자, 예술시장, 미래가치라는 8개의 주요 핵심과제를 설정하고 있지만, 지역문화 격차 해소와 지역문화 발전에 대해서는 하위 카테고리에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핵심과제들과 지역문화가 연계되어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문화에 대한 정책과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문화정책에 “사람”의 가치만큼 “지역”의 가치가 함께 공존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지난해 5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는 9개의 대표과제 중 6번째로 지역문화분권의 실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1.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 2.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조성, 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마련 및 계기 제공, 4. 중앙과 지역 간 협치 모델 설계라는 4개의 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시급하게 실현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먼저 1. 지역문화의 고유성 유지・발전에서 제시된 문화도시 조성, 관광도시 조성, 지역콘텐츠육성 등은 선언적 의미와 함께 이미 시행되고 있는 것들입니다. 특히 문화도시 조성과 관련해서는 현재 10개의 예비도시가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 연말이면 최초로 법정 문화도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문화도시 사업은 “시민의 문화력”을 재고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지역 간 경쟁보다는 각 도시를 어떻게 문화적으로 변모시킬지를 함께 고민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2.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위한 기반조성에서 인력양성, 재원확충, 정보공유 등은 지속해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여겨집니다. 특히 지역의 문화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문화기관 위상과 역할 재정립, 문화정책 전담기관 및 문화정보화 전담기관 지정은 논의가 필요합니다. 지역문화기관 위상과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문화재단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현재, 전국 226개의 시군구(2018년 12월 기준) 중 33.2%인 75개의 시군구에 기초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으며, 민선 7기에 들어 많은 기초 지자체에서 문화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46개에서 2018년 75개로 증가한 기초문화재단은 문재인 정부 들어 지역분권화가 강조되면서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표Ⅱ-9) 기초지차제의 문화재단 설립정도

구분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계
시군구	25	16	10	5	5	8	5	31	18	11	15	23	18	14	22	226
기초재단	15	1	2	0	0	6	1	14	8	2	3	4	6	3	4	69
비율	60%	6%	20%	0%	0%	75%	20%	45%	44%	18%	20%	17%	33%	21%	18%	31%

2018년도 지방자체단체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2017.12.31.기준), 행정안전부홈페이지(2018.12)

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서울은 25개의 시군구 중에서 15개로 60%, 경기가 31개 시군구 중에 14개로 45%, 대구가 8개 중 6개로 75%이고 나머지는 저조한 편입니다. 서울과 경기를 합쳐 39개로 조사대상 69개의 60%에 이릅니다.

이러한 지역편중보다도 더 큰 문제는 기능에 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은 대부분 시설이나 축제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몸담은 김해문화재단은 9개, 도봉문화재단 12개, 수원문화재단 10개,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18개, 화성시문화재단 22개의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운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상황에서 지역의 문화정책을 연구하는 기능을 가지기 어려운 현실이어서 지역과 지역, 지역과 광역, 혹은 지역과 중앙 간 협치를 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 어렵습니다. 문화재단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설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문화정보화의 중요성을 현장에서는 실감하고 있지만, 아직 기초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화와 관련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도시도 몇몇에 불과합니다. 지속적인 개선방안이 나와야 할 듯합니다.

3.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마련 및 계기 제공이라는 카테고리에서는 지역문화 협력위원회 설치근거마련과 주민참여 문화예산 제도지원은 새롭게 추진해야 할 과제들입니다. 지역과 지역, 광역과 지역, 중앙과 지역 등 권역별 협력위원회가 가동될 필요가 있으며, 정책교류와 성과공유가 활발하게 이루어 져야 합니다. 특히 문화재단 내에서도 광역과 기초 간의 활발한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잘 활용하면 사회혁신과 연계되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도 주민 스스로 의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리빙랩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시민이 설정한 과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 중앙과 지방 간 협치 모델 설계에서 지역문화, 예술분야 협력체계구축은 당연히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예술위원회, 예술지원기구(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진흥원 등), 기초광역문화재단, 문화원의 협력체계는 만들어 져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문예회관 연합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도 새롭게 재조정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문화재단 대부분이 문예회관을 운영하고 있고 점점 그 수사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새 예술정책에는 “지역 공공 공연시설 운영혁신 및 민간협력 강화”가 과제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에서는 238개의 문예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시설을 공연 중심으로 사고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문예회관에는 공연장 외에도 정책기능이나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사업들이 운영 중입니다. 그중에서도 문예회관 전시실은 아무런 지원체계가 없어 대부분 대관 위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교육이나 정책적인 기능도 사정은 다르지 않으며 특히 생활문화와 관련해서도 공연장의 역할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문예회관의 다양한 기능에 맞춰서 말 그대로 “예술

이 살아있는 공간”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문예회관연합회뿐 아니라 문화재단과의 역할분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외에도 문화비전 2030에서 담고 있는 문화권, 예술인 권리, 성평등, 문화 다양성, 사회혁신 등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정책적 접근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체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문화비전 2030에 담겨 있는 내용이 새 예술정책에 반영되어야만 현실화할 수 있습니다. 지역은 지역대로, 광역은 광역대로, 국가기관은 기관대로 해야 할 역할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 “지역”의 가치를 실현하는 문화정책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단위별로 유기적인 정책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한 다양한 차원의 토론회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지역문화정책 환경 변화와 대응

서우석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 그동안 지역문화정책은 지방자치제도의 도입과 정착, 삶의 질에 대한 관심 제고, 문화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문화재단 확대, 재생 사업 확산 등을 바탕으로 양적, 질적 성장을 경험했으나, 발표문에서 제시된 바와 같은 정책 기조 및 환경 여건 변화에 따라 재도약 계기 마련을 위한 다면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 지역문화정책 핵심 지향이 “격차해소”에서 “자치분권”으로 전환되면서 다음과 같은 변화 예상
- 지역문화정책의 “지역 정치화” 심화: 도구화, 종속화, 일관성 상실의 위험 증가
- 문화재정의 급격한 축소 가능성 상존
- 지역문화정책의 필요성/정당성 확보를 위한 수요기반 정책 추진의 중요성 강화

○ 전체적으로는 분권화에 대한 모순적 입장을 해소하고, 전향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정책 이슈 고려 필요

○ 지역문화정책의 범위, 정체성 재규정을 통한 “동반자” 확대 정책 필요
- 넓은 의미의 문화정책에 바탕을 둔 생활문화 재해석 및 여가정책으로 확장 고려
- 교육정책, 육아정책, 공간정책, 복지정책, (정신)보건정책, 소상인정책, 세대정책(청소년, 베이비부머 등), 농촌정책 등과의 협력 사업 강화와 지속적 연대 기반 확대
- “재생”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적’ 해석으로 지역정책에서 문화정책의 선도성 확보

○ 경제적 자립 기반 확보를 위한 노력 경주
- 민간 공조, 협찬 재원조성 도입 확대
- “돈도 버는 문화활동”에 대한 이해 및 활성화 노력
- 관광 연계 강화를 통한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 문화관광, 창조관광, 관계관광 등에 대한 문화정책적 지원 확대

○ 취약 지역에 대한 중앙 정부 차원의 선별적 지원 지속 필요
- 자치 분권의 흐름 속에서 지역문화정책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 심화 우려
- 문화수요 저조와 정책 역량 빈곤의 악순환 발생
- 격차 해소의 문제의식을 역량 확보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 단계별 인큐베이팅 수행

○ 지역문화역량 강화 노력 집중
- 지역문화인력의 역량 향상 및 경력 개발 관리 필요
- 지역문화인력 대상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역문화인력 확대의 내실화, 직업 특수성에 기반한 일 여가 균형 정립, ‘소명의식’ 고취를 위한 상호방문 활성화
- 협력적 연대의 중요성: 공모 지원의 틀에서 벗어난 지역문화연대의 필요성
- 지역문화진흥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유관 지원 기관과 재단 협의체 협력의 단계적 강화를 위한 협력 사업 확대 필요

문화정책의 변화와 지역문화진흥의 실태

김광훈(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3]

한국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선진 문화 복지 국가 진입’이라는 목표를 두고 문화정책을 추진한 김영삼 정부와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을 중심 가치로 삼았던 김대중 정부 그리고 ‘사회 전반의 문화적 가치 확산’을 문화정책의 목표로 제시했던 노무현 정부의 공통점과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문화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성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정책과 법령은 한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사회적 목표와 이념이자 가치를 추구하므로 공공성으로 국민적인 합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

군사정권의 권위주의와 차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김영삼 정권을 문민정부로 규정하고 금융실명제, 정치권 사정 등 민주적 개혁을 시행하였다.

선진문화복지국가로의 진입을 목표로 **‘곁에 있고 함께하는 문화, 누구나 즐기고 신명 나는 문화’**를 중심으로 ‘문화 창달 5개년 계획(1993~1997)’ 수립하고 문화・체육・청소년진흥에 관한 계획과 더불어 문화정책의 근간으로 표방한 김영삼 정부는 문화 복지와 문화산업을 정책적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선언적인 의미로 구체적인 정책과 연결되거나 실행되지 못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민주화의 진전으로 삶의 질, 소득, 복지, 환경, 자아실현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교통, 공해, 문화시설 등 사회 환경적인 부분이 악화되었다는 평가와 지적이 있다.[4]

김영삼 정부는 추상적이고 공허한 문화 정책 목표 설정과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실행되지 않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후 1997년 **‘문화비전2000’ 계획**을 수립하고 ‘다양성과 통합성의 문화’, ‘풍요로운 삶과 민주주의적 문화’ 그리고 ‘문화산업과 산업의 문화화’, ‘통일 지향의 민족문화’, ‘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적 보편성’을 제시하고 정책과제로 ‘창조적 인간을 위한 문화교육’, ‘문화예술창작에 대한 지원 확대’ 문화산업육성과 ‘지역문화 활성화’, ‘통일을 지향하는 민족문화 확립’, 한국문화의 세계화[5] 등을 제안하고 있으나 이 또한 임기 말 정책제시로 실현불가능한 선언적 외침으로 그치고 말았다.

---

3) 고려대학교 문학박사, 고려대학교 문화창의학부 겸임교수 2019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역협력위원 2018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정책위원 2017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정책위원 2016 한국문화예슬교육진흥원 지역협력위원 2015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호남제주지회 감사 2011~2019 전남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장 2008-2010 안산시청 문화예술전문위원 2000-2018 고려대학교문화스포츠대학원, 경희대, 건국대, 한국외국어대, 서울과학기술대 강의 2013~2015 대한민국청소년국악제 기획 2010 서울사이버대학교 최우수강의교수상 수상 2012 여수세계박람회 전라남도지사 표창패 수상

4) 이천표 민주화와 경제적 삶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과 정책연구 16권 1호 서울대사회과학연구소 1994

5) 원용진 문화정치적 접근을 통해 본‘국민의 정부’ 문화정책, 한국언론학 연구, 커뮤니케이션북스, 1999

김대중 정부는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조조정과 사회통합 그리고 시장경제 중심의 정책 중심으로 1997년 문화예술에 검열과 폐지 그리고 창작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문화부의 확대개편 및 1% 예산확보와 **문화지방화 실현, 계층 간 문화격차해소, 문화 향수권 강화 등을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문화의 세계화와 국가전략산업으로 관광산업을 추구하였다. 그리고 1998년 국정 100대 과제로 '수준 높고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문화가 사회의 중심가치가 되는 '문화시민사회'와 '민족공동체의 기반형성', '한국문화의 정체성 확립과 보편적 세계주의를 추구'하는 정책을 중심으로 10대 중점과제와 21세기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정책이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선언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문화정책과 같이 김대중 정부의 문화정책에서도 구체적인 평가와 판단은 어렵다. 대표적으로 문화 복지 정책에서 김영삼 정부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문화 복지 확대'**와 김대중 정부의 **'중산층과 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복지 확대'** 차이점과 객관적인 성과를 찾기 어렵다. 문화를 통한 지역과 세대 간의 문화 불균형은 김대중 정부에서도 해소 되지 못하고 수도권 중심의 문화로 편중되었다.

2001년 지역문화의 해를 지정하여 문화의 격차해소를 위한 기획과 1999년 발표한 **'문화산업비전21'**과 '콘텐츠 코리아 비전21' 그리고 '문화산업진흥 5개년 계획' 등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적 제도적인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의미는 있다.[6)]

개혁과 통합을 바탕으로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 더불어 사는 균형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취임사에서 밝힌 노무현 정부는 '새 정부 문화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며 10대 의제 가운데 교육개혁과 문화강국 실현, 지방분권과 국가균형 발전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기본방향을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수정하고 사회 공공성의 강화와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적 생산성 제고를 제안하였다.[7)]

문화를 정치와 경제에 종속시키지 않고 자율성을 중시하는 **문화민주주의로 확대와 문화다양성과 정체성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으로 혁신을 위한 문화예술계 인사의 영입과 임명 그리고 문화시민단체의 제안과 요구를 수용하며 많은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2003년 **'창의한국(21세기 문화의 비전)'**을 문화정책으로 입안했으며 수정과 보완을 거쳐 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화를 핵심으로 창의력을 설정하고 2004년 '창의한국' 문화정책으로 발표하였다.

창의한국의 5대 기본방향으로 문화의 참여를 통한 창의성 제고', '국가 균형발전의 문화적 토대구축', '문화를 국가발전의 신성장 동력', '평화와 번영을 위한 문화교류협력증진'으로 설정하고 분야별 27개 과제를 제시하며 문화민주주의를 적용한 문화적 권리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8)] 그러나 2003년 문화산업비전 보고대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도 보고했고 매년마다 보고해서 대통**

6) 이연정 문화산업정책 10년 평가와 전망,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보고, 2005
7) 강내희 노무현정부 문화정책의 원칙과 방향 그리고 과제설정, 대통령직 인수위 선정 10대 국정의제를 중심으로 , 새 정부 문화정책관련 정책제안 토론회 자료집, 2003
8) 박인배 새 정부 문화예술정책 주요방향 제안, 새정부 문화정책관련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3

령도 국민도 모두 알고 있는 내용을 지원할건가 말건가 하는 내용으로 보고하는 방법보다 과감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문화서비스, 공공문화서비스를 위한 기초문화에 관한 행정" 에 검토와 지원을 강조하였다.[9)]

노무현 정부의 문화정책은 '참여'와 '균형' 발전을 위해 민주주의 진전을 이루어 내고 '문화적 가치의 확산'과 문화다양성제고 등 문화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다고 평가한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문화정책을 비교해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정책으로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문화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문화 복지와 미래 국가 산업으로서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지난 2018년 5월 16일 발표한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비전 2030의 9대 의제는 무엇이 다른가? 라는 질문에 **사람 중심의 문화와 젠더 불평등을 해소하고 상생과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열거한 정권보다 보다 시대의 변화를 반영한 정책적 논의를 포함하고 있으나 **정책과 예산을 수반하는 문화정책의 구체적인 실행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공간과 공공적인 부분으로 형성하고 활동하는 영역을 공공부문이고 이와 대칭되는 개념이 바로 시장으로 본다.

시대적 변화와 정책을 반영하여 개정된 대표적인 법령과 시행령이 바로 문화예술진흥법이며 제1조 목적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민족문화창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다.(법률 제15816호 일부개정 2018.10.16.)

문화예술적인 영역에서 공공성이란 공공의 참여를 보장하고 공공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예술 자체가 개인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풍부하게 하고 사회구성원의 공동체와 의식강화 그리고 예술의 교육적 기능 등으로 공공성과 공익에 기여하는 내재적 속성으로 공익에 기여한다.[10)]는 당위론으로 예술의 질적 발전과 문화적 평등 그리고 교육기회의 균등한 제공에 기여할 것을 요구 받는다.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조 '이법은 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률 제15815호 개정2009.2.6. 시행2009.5.7.)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 공통으로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에게 문화적 삶의 가치를 향상**하고자 한다.

문화산업진흥의 범위의 확장과 분류체계의 시대적 변화로 개념과 특성이 변화하지만 일반적인 생산과 제조활동이 아닌 문화예술 활동과 문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므로 문화산업의 보호와 육성 그리고 문화다양성의 제고를 위한 정책적인 측면에서 필요성을 지니고 있다.

문화비전 2030 문화정책으로 중앙집권에서 자치분권으로 지역문화자치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9) 김창호, 노무현 따라잡기, 랜덤하우스중앙, 2004
10) 이혜경, 공공예술지원과 예술의 공공성, 영국의 경험, 문화정책논총, 2001

2014년 1월 28일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지역문화진흥법은 문화기본법 제9조(문화 진흥을 위한 분야별 문화정책의 추진) 10호 '지역문화의 활성화'에 근거하고 있다. 전체 7장 24개조와 부칙 4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 '목적'으로 '지역문화', '생활문화', '지역문화전문인력' 에 관한 법령으로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5년 마다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문화자치를 위한 환경조성, 지역주민의 참여, 중앙과 지방의 새로운 역할관계, 지역의 자율성과 책임성에 대한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그러나 2018년 10월30일 재정분원 추진방안 확정 발표에 따른 지방이양으로 19개 부처 소관 66개 법률이 일괄 개정되어 권한 이양이 추진되고 있다.

2020년 3.5조원 규모의 지방이양의 기본원칙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제고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2022년까지 7대3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정과정에 대하여 입법성과 달성을 위해 재정에 관련된 사항 등 법적 실효성에 시행에 필요한 조항들을 누락시킨 점과 지역문화자치의 이념이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11)]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자치분권, 지방이양에 따른 정부방침으로 2020년 지역 문화예술 지원 사업(국고)의 지방이양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포괄적인 예산의 형태도 의문이다.

2019년 6월3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재정분권 추진방안'으로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국세 부가가치세 4%p 지방소비세 전환완료, 2020년 지방소비세 6%p 전환, 약3.4조원규모 국고보조사업의 자치단체 일반사업으로 전환 등의 방안 등이다. 2010년에 도입된 지방소비세 이루 최대 규모의 지방세를 확충하고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겠다며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지방분권과 이양에 대한 원칙적인 정책방향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정책이행을 위해서는 지역문화예술지원 재정의 현실과 미래를 예측반영하고 지역문화예술 현장과 생태계를 반영해야 한다.

지역 간의 재정자립도와 지역의 정책적 우선사업에서 문화예술이 후순위가 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대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이에 지역문화정책의 추진체계를 확립하고 자생력을 가지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역의 현실은 대응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2020년 축소 또는 삭감되는 지역문화예술특성화 예산과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예산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기초문화예술지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역문화진흥재정 확보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지역문화예술 생태계와 여건을 반영한 지역문화예술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정책적인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11) 김해보, 지역문화진흥법의 형식주의적 제정과정에 대한 제도론적 이해 , 서울시립대대학원 학위논문, 2016.12

분과별 토론

발표 Ⅱ 기초,광역,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전략 방안

토론 1

정인금 | 강원문화재단 미래기획팀장

토론 2

이희진 | 대전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토론 3

임학순 | 카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토론 4

권경우 | 성북문화재단 문화예술부장

토론 5

강승진 | 히든어셈블 대표

토론 6

조정윤 | 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광역문화재단의 문화거버넌스와 경험사례

정인금(강원문화재단 미래기획팀장)

올해 2월 광주에서 열린 한광연 정책포럼에서는 '문화자치를 위한 광역문화재단의 역할과 과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재단의 경영혁신' 을 주제로 새로운 문화정책에 시대에 맞는 광역문화재단의 방향에 대해 고민한 바 있습니다. 저는 앞선 한광연 정책포럼을 연속선상에 두고 김영현 지역문화진흥원장님의 발제문을 읽어 보았습니다.

전달체계를 논하기에 앞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하며 상향식 정책수립을 위한 광범위한 논의테이블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러나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 광역문화재단이 문화를 통한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 궁금증을 더하게 됩니다.

저는 광역문화재단 실무자로써 그간의 짧은 경험을 바탕으로 기초, 광역문화재단의 거버넌스에 대해 토론해보겠습니다.

며칠 전, 강원도 문화예술과에서는 2014년도에 수립한 강원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대해 평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내 18개 기초자치단체 문화예술부서, 지역문화기관(문화재단, 문화원), 예총 민예총 등 예술인연합회 30여명이 모여 그간의 강원도 문화정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발제문에서 이야기하는 일상이 문화가 되고 문화가 지역사회의 가치재가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아직 피부에 와 닿지 않음은 강원도 문화정책에 관여하고 있는 대다수의 관계자들이 여전히 예술사업 중심의 고민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확인하는 자리였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긍정적 결과로 논의된 문화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은 광역문화재단에게 요구하는 지역 내의 상향식 사업건의로 볼 수 있으며 현재 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을 대표하는 문화관광연구원의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강원문화재단이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에 조금은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강원문화재단은 2014년 9월부터 강원지역문화재단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포럼이 계기가 되었으나 이후 지속적 포럼개최와 협력사업 논의보다 느슨한 구조의 친목 회의형식을 벗어나기 어려웠습니다.
2017년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공모신청을 위해 논의를 하던 중 기초-광역문화재단 협력사업 모델개발을 목적으로 춘천, 원주문화재단과 사업에 신청하여 2년간 지역의 청년들과 교육을 추진했으 올해는 강릉, 영월문화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원지역의 문화전문인력양성사업은 기초와 광역의 역할분담 하에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은 멘토 섭외, 실습 중심의 커리큘럼 계획, 실행 프로젝트 관리를 맡고 있으며 광역문화재

단은 교육생 모집, 지역별 교육생 네트워킹, 기획실행비 지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대응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춘천, 원주, 강릉을 포함하여 총 18개의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광역문화재단을 포함하여 9개 지역에 기초문화재단이 있으며 2019년 6월 현재 고성, 속초, 양양, 동해, 삼척, 태백 등 추가적으로 6개 지역에서 문화재단의 설립 타당성 연구를 추진하거나 설립 초읽기에 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의 설립 목적이 지역 문화정책의 전문적 실현을 위함인지, 축제나 시설 등의 민간위탁이 목적인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문화재단이 목적인지 아직 구체적 실체를 볼 순 없지만 광역문화재단의 실무자로써 기초, 광역문화재단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 운영되고 있는 기초문화재단의 요구 외에도 향후 설립될 기초문화재단과의 협력을 위해 그 방법과 내용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에 강원문화재단은 중장기 경영전략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새로운 비전 아래 설정된 많은 추진과제 중 “공공-공공, 민간-공공 문화정책 거버너스 활성화” 사업은 기초문화재단, 문화기획자, 예술가 등 다양한 문화예술 주체들의 연계 협력을 통한 풍성한 문화활동을 위해 공공-공공 문화정책 거버넌스와 민간-공공 문화정책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예산에서 막힌다는 것입니다.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에 앞서 수년 전부터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창작, 생활 등)을 기초문화재단의 설립 지역의 유무에 따라 변별력 있게 추진하고자 수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늘 꼬리표를 달고나오는 예산이었습니다.

문화정책 거버넌스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제고, 기초-광역 간 지역 특성이 담긴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인식의 정도와 지역문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학습할 대상도 찾기 어렵습니다. 지역문화자치를 경험한 적도 학습한 적도 없이 과정을 살고 있다는 것이 답답하기까지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앞선 지역문화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의 경우처럼 지역의 정책과 사업의 환경의 한계를 인정하고 가장 가까운 단위와의 협력사업을 시작하여 지역의 많은 기관, 단체 시설로부터 함께하고 싶은 욕구를 만들어 거버넌스로 확장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한 경험과 사례의 바탕이 있어야 향후 문화자치를 위한 정책과 광범위한 논의테이블의 상이 정립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광역문화재단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진다고 합니다. 광역만 중요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역이라는 지역의 문화를 보호하고 증진하고 육성해야 할 문화재단의 다양한 역할에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런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고 보다 구체적인 논의의 단계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법과 행정은 늘 맨 뒤에 따라옵니다. 강원문화재단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의 소중한 거버넌스를 갖추어 지역문화정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포럼이 큰 울림이 되어 법과 행정의 변화에 속도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되길 바라며 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지역문화정책의 혁신체계 구축해야

임학순 (카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Ⅰ. 질문 사항

김영현 원장님께서 발표문에서 강조하신 “통합적 구조 접근” “새로운 변화를 대응하고, 선도하는 문화전략의 필요성” “지역문화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안정망” “신뢰와 협력 기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에 대해서 저 또한 같은 생각입니다. 원장님은 또한 “문화행정의 정치성” 요인을 제기하면서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통로의 변화”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초로부터 출발하는 정책단계”를 강조하셨습니다. 지역문화의 혁신자, 발신자로서의 지역문화재단 위상과 역할을 고려할 때,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역현장을 다니다 보면, 문화영역 내에서도 지역 문화정책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의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많습니다. 신뢰 수준도 높지 않습니다. 문화의 가치가 앞으로도 지속, 확대될 것이라고 하지만, 지역문화정책 현장에서는 여전히 문화의 가치 인식 수준이 낮습니다. 지역재생, 복지, 교육, 관광, 지역경제 분야에서 바라보는 문화의 가치 인식 수준 또한 높지 않습니다. 지역의 문화정책 관계자들은 지역 현장의 기획과 자발성을 틀 안에 가두려고 하는 중앙의 문화정책 사업체계, 문화의 가치 실현이 갖는 의미와 체계에 대한 지역사회의 공감 부족이 주는 답답함. 사람과 현장을 만나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 대한 지원 인식 부재 등등 많은 애로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자치 시대,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특성에 적합한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급자 중심, 집행자 중심의 지역 문화행정 체계는 많은 변화를 필요로 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통로” 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그러나 현재 오해와 불신이 크고, 협력적 정책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구성주의적” 정책체계는 실현 과정에서 극복해야 할 요소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립니다. 이러한 지역문화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시점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과 통로”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위한 정책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Ⅱ. 정책프로그램에서 정책체계로 지역문화정책 혁신 환경 조성해야

제가 지난해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체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지역문화예술교육 정책의 경우, 아직도 정책프로그램(policy program)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고, 소통, 혁신, 협력 등을 위한 정책체계(policy system)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중앙에서 기획된 정책 프로그램을 지역 현장에서 추진, 관리하는데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프로그램 중심 모델은 정책의 지속성과 혁신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의 경우, 지역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이슈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원 사업을 관리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문화예술교육 사업에 대한 정책의지가 높았지만, 중앙정부 또는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프로그램 수행자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기초문화재단의 경우, 정책 집행의 일선기관이라기 보다는 정책 혁신자(policy innovator)로서 그 중요성이 커질 것입니다.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도 기초 모델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문화 분권. 문화 자치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정책의 가치로 현장 적합성, 혁신성, 다양성을 중요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현장 적합성은 문화정책이 지역주민의 문화권을 실현하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적인 지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장님도 발표문에서 제시하신 것처럼 이제 지역문화정책은 “문화”영역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 영역으로 확장하여 총체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통합적, 융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가 지역사회에서 갖는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신하고, 이를 공유해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부처간 협력 사업 또한 지역사회 단위에서는 지역 특성에 적합하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혁신성은 문화 분권의 맥락에서 기초단위에서부터 구성해가는 과정체계와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소통, 협력, 연구개발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이 스스로 문화정책 문제와 문제 해결 방법을 탐색하는 과정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혁신성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함께 할 때 확보될 수 있습니다. 지역문화재단이 지역의 문화 생태계와 문화자원, 그리고 문화정책 이슈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갖출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다양성은 지역문화정책 환경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는 지역문화정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중앙 단위에서 문화정책 사업의 기획과 운영의 틀을 구체적으로 설정할 경우, 지역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정책과 현장의 괴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장 적합성, 혁신성, 다양성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역문화정책 추진기관들은 어떻게 이러한 현장 적합성, 혁신성, 다양성을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문화재단의 경우, 조사 및 데이터 구축 기능,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기능, 연구 개발 기능이 한층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문화행정 거버넌스 체계는 민간부문과의 파트너십이 구축될 때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역의 문화예술단체들은 인력, 공간, 프로그램, 역량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책프로그램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 발전의 주체 및 협력자로의 위상을 부여받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민간부문의 문화관계자들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부문이 자신들을 문화프로그램 수행자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며, 총체적 관점에서 공동 기획자, 공동 협력자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앞으로 문화행정 거버넌스 체계에서는 이러한 민간부문의 역량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인가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광역-중앙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제언

권경우(성북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기초-광역-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과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김영현 원장님의 발제 원고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는 몇 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제안하는 것으로 토론문을 대신하겠습니다.

(1) 기초-광역 문화재단, 중앙정부(문화부)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진지하고도 빠른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역문화재단은 대부분 설립되어 있고, 기초문화재단은 빠르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문화재단의 조직, 기능과 역할 등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광역과 기초의 문화재단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절실합니다. 지금처럼 문화부는 문화재단 문제에 대해 수수방관하고 있고,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와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는 본질은 외면한 채 기분 좋은 교류와 협력, 네트워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정작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문화부(중앙정부) 등이 상호 경쟁하는 체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초 단위에서 보면 각각의 사업이 서로 모르게, 혹은 무시하면서 진행되는 일이 많습니다.

또 다른 논의로는 광역문화재단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이라는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기초문화재단 차원에서는 '문화/예술'이라는 영역으로 한정을 하게 되면 현장이라는 구체성이 떨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문화'라는 좀 더 넓은 의미의 범주에서 주민의 일상과 구체적인 현실을 담아낼 수 있는 폭넓은 개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기초 단위의 생활세계에서는 '문화/예술'로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 교육/복지/건강/도시재생/사회적경제/마을활동/문화예술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하거나 연결됩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 단위의 문화정책은 단순히 문화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실제 시민의 삶과 연결되는 다양한 영역을 고려함으로써 통합적 정책으로 설계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지역문화진흥기본계획 2020에 나와 있는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는 다른 형태의 광역 단위 '지역문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기초문화재단이 꾸준히 설립되고 있지만, 지역의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현실이 존재합니다. 그에 비해 광역문화재단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재원과 조직 구조를 갖고 있으며, 실제로 개별 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거버넌스를 형성하는 것은 필요한 일입니다.

광역시-광역문화재단-기초문화재단-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문화위원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문화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지역문화위원회에서 지역문화를 둘러싼 다양한 조건과 한계를 검토하고 광역 단위의 문화정책의 수립과 그에 따른 사업 설계 및 예산에 이르기까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논의가 부재하거나 형식적인 과정으로만 존재함으로써 문화정책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기초의 현장과는 동떨어진 광역 단위의 성과에 급급한 사업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을 수립한다는 것은 미래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과 동시에 사업과 예산의 적절성과 필요성을 담아내는 일입니다. 결국 어떤 정책을 수립하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과 예산 배분이 달라집니다. 그에 따라 광역 시도 혹은 광역재단에서 해야 할 사업의 내용도 구분될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아울러 기초는 단순한 수혜의 대상이거나 정부나 광역의 결정에 무조건적으로 따르는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지역문화 정책의 적극적인 생산자로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3) 지역문화를 만들어가는 구성 요소로 공간과 사업과 주체를 들 수 있습니다. 공간은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공간을 모두 포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칫 공공의 공간으로 한정하거나 '문화예술공간'으로 제한한다면 지역문화 논의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공간은 공공에서 운영하는 공간뿐만 아니라 식당, 카페, 서점, 작업실, 연습실, 소공연장 등 모든 공간이 대상일 수 있다. 공간의 용도나 목적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공간 운영의 가치와 방향이 무엇인가에 따라 지역문화와 공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사업이나 공모사업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 지역문화의 사업 과정에서 정작 협력 및 협업의 관계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경쟁과 견제의 관계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업의 설계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와 주체, 사업이 진행되는 현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 수행과 지역문화의 변화와 발전은 무관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많은 지역문화 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실제로 지역문화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소는 주체의 문제입니다. 지역문화의 지속성은 결국 주체를 어떻게 남기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구성하는 데 가장 통합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서 문화 영역에서 정작 그 문화를 일구어가는 주체들을 남기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역문화생태계라는 차원에서 주체를 재생산하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멋진 디자인의 결과보고서나 현란한 영상결과물이 아니라도 어떤 사업을 통한 작업과 활동, 그리고 그것을 수행한 주체들이 지역사회에 어떤 방식으로 연계하고 결합하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정책과 사업, 예산의 층위에서 고민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더 이상 예술가나 기획자들이 문화예술사업의 '보따리장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의 변화를 만들어 낼 행동변화를 기대하며

강승진 (히든어셈블)

본 토론문은 조직에 계신 분들께서 지역담론과 정책토론을 중심으로 해 주실거라 믿어, 조직에 속하지 못한 자의, 철저하게 개인의 입장으로 지엽적이고 미시적인 어떤 단편들만 보고 쓴 토론문 일 수 있으며, 잠시 조직을 떠나 자유인의 신분으로 최근의 흐름을 읽지 못한 자의 우매한 글 일수도 있으니 최대한 넓은 마음으로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전략 방안과 관련한 토론문을 써야 하는데, 자꾸 딴 생각이 든다. 그리고 그 딴 생각은 아무래도 잠시 지역문화재단 종사자에서 자유인의 신분으로 세탁한 현재의 나의 상태와 관련이 있기도 하는 듯.

나의 기억으론 지역문화재단의 주요 역할과 광역기초의 역할분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던 시점은 2012년 정도로 기억한다. 그 뒤로 광역문화재단 대표자회의를 거쳐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가 만들어지고, 또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가 만들어지는 흐름으로 나아갔으니. 더불어 한광연과 전지연이 주최하는 지역문화관련 정책포럼의 주요 주제들이 문화분권, 지역분권, 거버넌스, 역할분담 등의 논의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한발도 못나간 듯싶다.

누구 때문일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아주 편하게 상황을 넘긴다.
기초는 광역과 현장으로. 광역은 중앙과 기초로, 현장으로. 중앙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힘과 광역과 기초와 현장으로. 즉, 그날그날 그 테이블이 앉아 있지 않은 다수의 누군가로 우리는 탓을 돌린다.

그런데, 드는 궁금증 하나는 거버넌스에서 다루어야 할 내용은 그렇다 치고, 거버넌스의 구조와 형식은 쉽게 생각해 보면 여기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태도 문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 그리고 거버넌스를 대하는 태도가 변화하면, 그곳에서 논의하는 담론과 내용도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고 보니 거버넌스가 뭐고 문화행정 거버넌스는 뭐야?
행정학 용어 사전에 보면 거버넌스는 공공경영체계를 말한다. 지역사회에서부터 국제사회에 이르기까지 공공조직에 의한 행정서비스 공공체계의 복합적 기능에 중점을 둔 통치나 지배가 아닌, 경영의 냄새가 나는 의미로 공공서비스 공급체계를 구성하는 다원적 조직체계 내지 조직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말하는 인간의 집단적 활동 패턴을 말한다. 문화행정은 문화와 관련한 공공문제이 해결과 문화발전을 위한 일체의 행정활동을 말하니 문화행정 거버넌스는 결국, 거버넌스 문화경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군. 문화행정에 거버넌스라는 경영관점. 결국 일이 잘되게 하기 위함인데 왜 맨날 우리는 이러고 있지.

그렇다면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 전략방안은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방식에 아주 뻔한 **“문화적 경영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에 따른 답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그 질문은 조직 안으로, 지역으로, 기초와 광역, 기초・광역・중앙이 앉게 되는 테이블로 던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우리가 아닌 다른 곳에는 질문을 잘 던진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문화도시사업, 문화적 도시재생 사업에서 던지는 질문들과 문제해결방식으로 제안하는 것들을 보자. 시민들에게는, 현장에게는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왜 그러고 있는가. 내가 경험한 지역문화재단의 인재들은 똑똑하다. 잘났다. 돌아가는 판에 대해 분석도 잘한다. 대안도 잘 만든다. 문화재단에서 나오는 수많은 정책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자료집들을 보라. 그럼에도 우리는 왜 늘 결핍을 느끼고 있는가.

보이는 않는 꼰대가 된 것은 아닐까?
꼰대 담론이 우리사회를 휩쓸고 있고, 내가 혹시 꼰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의 자기검열들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데 확실하게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에서 확실한 꼰대가 되었다. 자기검열하는 꼰대들도 조직 안으로 들어가면, 조직 탓으로 숨으로 모든 것이 편안해 진다. “뭔 소리야? 지금까지 잘해 왔는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누가 꼰대 앞에서 당신들을 꼰대라 하겠는가? 더구나 지역에서 눈먼 돈도 많이 들고 있고, 때론 선심 쓰듯이 돈도 잘 푸는데,,,꼰대 앞에서 당연히 잘했다고 해야 점수도 따고 배고픈 동네에서 일도 할 것 아닌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이 뭐야?
꼰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니, 아니 이렇게 가다가 꼰대들을 다 집에 보내자고 할지도 모르니 좀 잘하자는 이야기이다. 위만 바라보고 역할을 잘하라고 하지 말고, 나의 역할을 잘하자는 이야기이다. 어차피 체계는 잡혀있고, 그 안에서 정책과 예산은 내려오고 있으니, 늘 아래를 살피며, 현장을 살피며 우리의 역할을 잘 해보자는 뻔한 이야기이다.

인정받기만 원하지 말고 쫌 인정해 주자. 존중받기를 이야기 하지 말고 존중해 주자.

기초는 현장의 예술가, 매개자, 활동가, 기획자들을 존중해 주고 배려해 주자. 광역은 지금까지의 현장만 챙기지 말고, 그 현장 안에 기초문화재단을 포함하고 그들을 존중해 주자. 중앙은 말해 뭐하겠는가. 당연히 그럴거라 생각한다.

본인들이 다하려고 하지 말자. 생색내지도 못하는 일을 뭐 그리도 많이 하는가. 기념품으로 존재감 나타내는 거 말고 쫌 제대로, 생색날 만한 일들을 중심으로 하자. 사업만 증가시키지 말고 일몰사업도 좀 만들자. 뭘 더한 거 가지고 평가 말고 기존에 하던 쓸데없는 일 중 뭘 없앴는지 그런 것도 쫌 평가하자. 그러면 안 되는 건가? 조직 커간다고 자랑하는 것 말고 우리는 이렇게 조직을 슬림화 했습니다 하는 자랑도 좀 듣고 싶다. 현장의 좋은 활동가・기획자 흡수 말고, 그들이 현장에서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 뒷심 좀 만들어주고, 책상에 앉아 기념품으로 존재감 나타내는 똑똑한 재단 직원들 현장에 가서 운동도 좀 할 수 있게 풀어주고, 그러다 현장에 책상 만들고 일할 수 있게 우리 쫌 다같이 해보면 안 되는 걸까?

너무 나갔나보다. 다시 거버넌스로 돌아와서

'거버넌스 구축' 에 대한 우리의 상상력이 너무 뻔한 것 같다. 딱딱한 회의실에 명패 놓고 한자리씩 하는 분들 앉혀놓고, 현수막을 배경으로 사진 찍고……. 좋은 이야기 했다고 밥 먹고. 나도 다른 대안은 없지만,,,거버넌스에 대한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자. 실질적 거버넌스가 일어나는 현장을 좀 확대해 보자. 이걸 잘하는 사람들이 우리 조직에 다 있다. 최소한 한사람은 있다. 그 사람이 하는 걸! 조직의 DNA로 확장하면 된다. 거버넌스?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 일종의 전이지대 아닌가? 그런 전이지대가 재단 사무실, 회의실에 있는가? 생생한 야전 현장이 그런 곳 아닌가? 그럼 화학적 반응이 필요한 대표들부터, 본부장부터 실질적인 거버넌스 자리에 명패 떼고 앉히면 안 되는 건가... 그래야 현장에서부터 존중받는 느낌, 인정받는 느낌 나는 거 아닐까.

2장만 쓰려고 했는데, 그냥 급 마무리 해야겠다.

맥이 끊기면 백이 빠진다고 그랬다. 맥이 빠지면 백이 끊긴다. 우리 모두 서로 맥 빠지지 말게 그냥 쫌 잘하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태도를 바꾸면 된다.

태도.

-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를 대하는 마음가짐 또는 마음가짐이 드러나는 자세
- 어떤 일이나 상황 따위에 대해 취하는 입장

우리는 지난 시간,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 잘 학습되어 있다. 잘 학습되어 있어 서로 밝은 얼굴로 인사치레만 할뿐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수많은 암묵지들이 만들어졌다. 원장님이 이야기 하시는 것처럼 잠자는 있는 무수한 암묵지들을 공유지로 만들고 그 공유지가 지역의 문화가 되고, 과정이 문화가 되는... 거버넌스가 자연스럽게 구축되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

그런 변화를 만드는 건 늘 그렇듯이 우리 모두, 스스로에게 있다.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는 한 이 모든 논의들은 공허할 뿐이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스스로의 변화를 만들어 낼 행동변화를 기대해 본다.

광역문화재단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자율성

조정윤(부산문화재단 문화유산팀장)

광역문화재단 문화행정의 사회적 가치 실현

공공부문의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향후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가 주요한 이슈로 등장 할 것이라는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그동안 문화예술이 문화적 가치만을 강조한 점에 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문화예술이 가치재로 인정받기 위해 지역문화재단과 같은 공공 문화예술기관의 사업에 대한 근원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화정책의 흐름을 보면 문화예술의 경제적 가치(90년대), 교육적 가치(2000년대), 도시재생의 가치(현재)로부터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 특히, UN SDGs(유엔 지속가능개발목표) 17개 과제를 문화예술에 접목 시키려는 시도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바야흐로 문화예술이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시대정신(zeitgeist)인 것이다. 10년을 내다보는 국가적 문화정책 주요 의제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설정할 당위성에 발제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실현은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최상위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재단 역시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에 따른 구체적 목표 수립과 명확한 전달 방식이 필요하다. 문화예술이 지역의 사회현상에 대응하는 정책적 아젠다를 설정하여, 전략체계 및 지원 구조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대응 체계 구축'이라는 지역문화재단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발제자가 강조한 문화 안정망, 욕구기반의 문화정책에서 역할과 권리기반의 문화정책으로와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에서 광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함으로서 문화예술 지원의 당위성과 문화예술의 존재론적 의미를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의 옹호론자로(advocates)로 사회통합 및 포용적 공동체에 기여하며 지역사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거버넌스를 통한 정책운용의 자율성 보장

발제자는 거버넌스는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제대로 작동 된다고 하였으나, 실상은 정책과 행정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는 일련의 경험으로 문화행정이 경직화 되는 점을 지적하였다. 정치권력에 대해 '스스로 알아서 기는' 문화행정의 '촌탁(忖度)'을 관료사회의 한계로 거론한 것이다. 문화예술 공적지원의 축을 담당하는 공무원, 지역문화재단의 문화행정가에게 정치로부터 자율성·독립성 보장은 결국 근원적으로 예술가들에게는 예술표현의 자유로, 정치권력에는 촌탁행위가 근절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과연 오늘날 기초, 광역, 중앙의 문화행정이 촌탁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 만큼 자율성과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다.

문화행정 거버넌스에 있어 예산과 전달체계를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문화비전 2030에는 분권에 기초한 지역문화 진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하였다. 지역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다. 분권에 기초한 지역문화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중앙정부, 지자체, 지역문화재단 간 정책전달채널의 상설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에서 그 역할과 위상을 보장한 지역문화재단이 정책을 제언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 수단으로 지역문화 재정의 자율성 확보와 문화재정이 더욱 확충 되어야 한다. 국가는 정책사업을 지자체 혹은 지역문화재단에 위탁 시 예산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포괄적 보조 형식의 교부 내지는 직접 출연을 해야 할 것이다. 지역문화진흥법의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에 관한 조항을 임의조항에서 강제조항으로 개정하여 재원에 대한 책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다.

광역문화재단은 책임성과 투명성을 통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특히, 예산배분에 대한 집행과 수혜자의 신뢰관계는 예술가들이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정산행위를 감시와 통제를 전제로 하는 보조가 아닌, 지원의 목표에 부응한다면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는 순수지원의 전환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현재 문화예술의 보조금(subsidy) 형태에서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보조에 비해 높은 지원금(grants)이 그 방법이 될 것이다. 실제로 지원금(grants)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장학금(fellowship)은 수혜자에게 어떠한 정산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 상호 신뢰와 공익적 목적이 전제되기 때문이다.

끝으로, 지역문화진흥원장인 발제자에게 지역문화진흥원 사업의 예산 전달체계가 보조금(subsidy)이 아닌 지원금(grants)으로 교부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듣는 것으로 토론문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문화분권·문화자치 공동선언

포용국가로 가는 길,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
2019년, 문화분권·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한다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포용국가로 가는 길, 지방자치를 위한 준비

2019년, 문화분권 · 문화자치 원년을 선언한다.

현 정부 문화비전의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으로 '사람'이 먼저인 문화를 통해 시설보다는 사람을 중시하는 문화정책을 천명한 바 있다. 더불어 국정과제로 제시된 포용국가의 3대 비전은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사회혁신 능력배양에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단위 '사무' 중심의 중앙권한 이양을 지양하고, '기능' 중심의 중앙권한 지방이양정책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1998년부터 설립되기 시작한 각 지역의 문화재단은 존립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자율성과 독립성을 위해 설립 준거를 다시 한 번 인식해야 할 시기가 도래하였다. 21세기 4차 혁명 시대에도 문화라는 콘텐츠는 다양한 방법과 유형으로 국민 삶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문화욕구 증가와 2000년대 이후 신세대의 새로운 의사소통과 삶의 방식 등장 등 미래가치를 위한 다양한 요구의 수용, 그리고 국민의 문화권 확대요구가 커져왔다. 따라서 이를 매개할 수 있는 지역단위의 지원 기관인 문화재단의 양적 성장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재단의 질적 역량 또한 함께 상승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분권형 개헌 제안으로 문화분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지역의 실질적인 문화분권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역문화재정의 확충뿐만이 아니라, 주민 참여 확대 및 문화다양성 실현, 지역별 특성화된 문화시설의 건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율적인 지역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이 전제되어야만 한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우리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주민과 함께하는 정부, 다양성이 꽃피는 지역, 새로움이 넘치는 사회"라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① 주민주권 구현, ②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③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④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⑤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⑥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과 33개 추진과제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종합계획에 맞춰 문화분권과 문화자치의 관점에서 수립된 '문화비전 2030'과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맞는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문화분권은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고유한 문화양식을 보호·확산하며, 지역 시민들의 문화향수와 문화 참여 권리를 보장하는 핵심 문화정책이다.” 라는 지역 문화분권의 원칙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함께한 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손경년, 부천문화재단 대표이사)와 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회장 김윤기, 광주문화재단 대표이사)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밝힌다.

하나.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해 문화예산을 마련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상호공존과 상생의 역할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문화비전 2030’ 에 따라 지역문화 분권, 자치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이행할 민·관 협치 체계를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지역문화재단은 ‘문화비전 2030’ 의 가치와 방향, 각 의제가 내포하고 있는 제안을 지역 안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

하나. 지역문화재단은 국민들의 문화 향유 증대와 함께 공공기관으로서 공익성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노력에 적극 참여한다.

2019. 6. 27.

(사)전국지역문화재단연합회, (사)한국광역문화재단연합회

MEMO